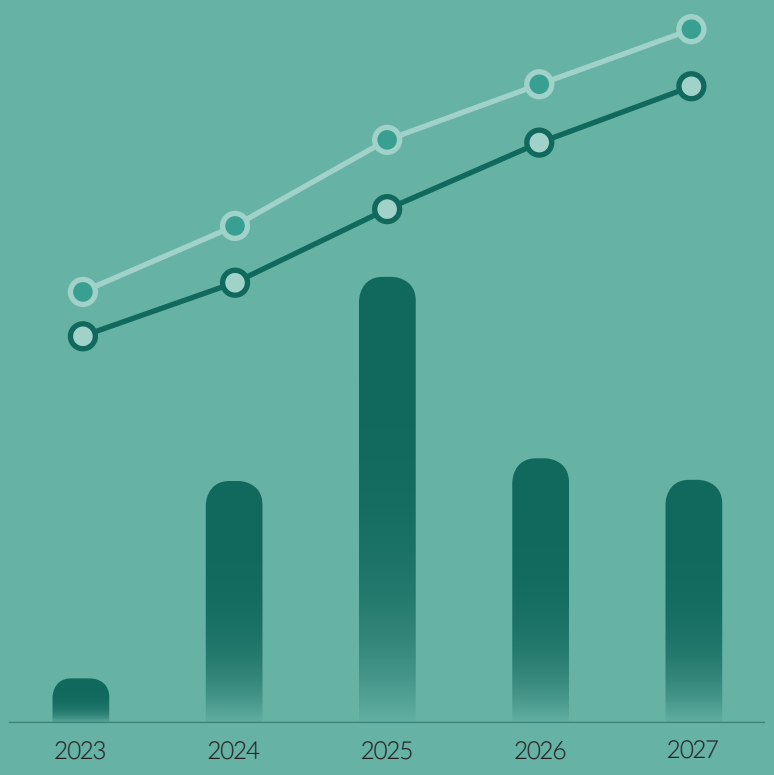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Tax Revenue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총 괄 | 신 항 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 혜 정 조세분석심의관
백 경 엽 세제분석2과장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전망·작성 | 총괄 박 정 환
소득세 강 민 지, 박 지 원, 문 석 휘
법인세 박 정 환, 이 정 훈
부가가치세 김 효 경
기타 세목 김 문 경, 최 천 규, 고 은 비, 박 성 은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강 숙 자 행정실무원
안 세 린 자료분석연구원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금년 예정된 재정사업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4년도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율은 금년의 대규모 부진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 세목 중 민간소비 개선 및 수출입 등의 증가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인세는 금년까지 이어진 법인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수입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향후 세입여건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및 향후 5년(2023~2027년)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본 보고서가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및 관련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차 례

요 약

Ⅰ.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1

1.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 1
가. 거시경제 여건 ····· 1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 3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5
가. 총괄 ····· 5
나. 세목별 전망 ····· 7

Ⅱ.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41

1. 2024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 41
2.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43
가. 총괄 ····· 43
나. 세목별 전망 ····· 46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68

Ⅲ.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73

1.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 73
2.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 75
가. 세목별 전망 방법 ····· 75
나.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 77
3. 2023~2027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79

〈표 차례〉

[표 1] 2023년 거시경제 여건 ····· 2
[표 2] 2023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기준 ····· 3
[표 3] 2023년 8월 국세수입 실적 ····· 4
[표 4] 2023년 국세수입 전망 ····· 7
[표 5] 2023년 소득세 전망 ····· 8
[표 6]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 16
[표 7] 취업자수 증감 추이 ····· 18
[표 8] 2023년 법인세 전망 ····· 19
[표 9] 2023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기준 ····· 20
[표 10]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2018~2022년 ····· 22
[표 11] 외부감사법인(비금융업) 실적 증감률: 2018~2022년 ····· 22
[표 12] 2023년 부가가치세 전망 ····· 24
[표 13] 2023년 8월 누적 부가가치세 실적: 지방소비세 제외 vs. 포함 ····· 25
[표 14] 2023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 27
[표 15]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유류분 세율 변화 ····· 30
[표 16] 2023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 32
[표 17] 2023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 33
[표 18] 종합부동산세 징수실적 및 전망 추이: 2019~2023년 ····· 36
[표 1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 ····· 37
[표 20]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 43
[표 21]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45
[표 22] 2024년 소득세 전망 ····· 46
[표 23] 2024년 법인세 전망 ····· 52
[표 24] 기업 경영 실적 추이 ····· 53
[표 25] 업종별 2023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 ····· 54
[표 26] 2024년 부가가치세 전망 ····· 57
[표 27] 2024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 59
[표 28] 개별소비세 에너지 주요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 60
[표 29]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 60

[표 30] 2024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 62
[표 31]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상속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 63
[표 32]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 65
[표 33] 2024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 69
[표 34]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 71
[표 35]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 73
[표 36]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76
[표 37]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77
[표 38] 2023~202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 79
[표 39]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 80

〈그림 차례〉

[그림 1] 종합소득세의 세원: 국민계정상 소득 기준 ····· 10
[그림 2]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 11
[그림 3]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과표양성화 지표 ····· 12
[그림 4] 국내 온라인 거래액 추이 ····· 12
[그림 5]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14
[그림 6] 최근 월간 지가지수 및 변동률 ····· 14
[그림 7]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 14
[그림 8] 연도별 토지 매매거래량 ····· 14
[그림 9] 연도별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의 전년대비 증감 추이 ····· 15
[그림 10]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 17
[그림 11] 당해연도 법인영업이익과 차년도 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 ··· 17
[그림 12] 반도체 가격추이 ····· 21
[그림 13] 통관수출액 추이 ····· 21
[그림 14] 원유(두바이유) 가격 추이 ····· 21
[그림 15] 광물종합지수 추이 ····· 21
[그림 16] 금리 추이: 2021.1.~2023.9. ····· 23
[그림 17] 통관수출입 추이 ····· 25
[그림 18] 성질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 25
[그림 19]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 26
[그림 2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26
[그림 21] 소매판매액 증감률 추이 ····· 26
[그림 22]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26
[그림 23] 신차등록대수: 2019~2023년 ····· 29
[그림 24] 담배판매량: 2019~2023년 ····· 29
[그림 25]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금액 및 증감률 추이 ····· 31
[그림 26] 연도별 8월 누적 관세환급액 추이: 2018~2023년 ····· 31
[그림 27]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22.1.~2023.8. ····· 34
[그림 28] 공시가격 상승률 및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 34
[그림 29] 일평균 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 35

[그림 30]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2014~2023년 ····· 37
[그림 31]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 41
[그림 32]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 47
[그림 33] 소매판매액지수와 국내 온라인거래액 증감률 ····· 48
[그림 34] 명목GDP를 이용한 주택시장 순환국면 진단 ····· 50
[그림 35] 월별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 ····· 50
[그림 36]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전망 ····· 51
[그림 37] 통관수출액 추이 ····· 55
[그림 38] 교역조건 변동 추이 ····· 55
[그림 39] CRB 선물지수 및 원유 선물가격 ····· 55
[그림 40] 원/달러 환율 추이 ····· 55
[그림 41] 반도체 생산지수 및 반도체 수출량증감률 ····· 56
[그림 42]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및 전망 ····· 58
[그림 43] 수입물가지수 및 원유가격 추이 ····· 58
[그림 44] 국제원유가격 동향: 2020.10.~2023.10. ····· 61
[그림 45] 원/달러 환율추이: 2020.9.~2023.9. ····· 61
[그림 46]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2013~2024년 ····· 61
[그림 47]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변동률 추이: 2021.1.~2023.8. ····· 64
[그림 48] 유가증권 증감률 추이: 2013~2022년 ····· 64
[그림 49] 부동산 유형별 증여거래 추이: 2021.1.~2023.8. ····· 65
[그림 50] 주요 증시주변 자금 동향 ····· 66
[그림 51]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 66
[그림 52]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2019.1.~2023.8. ····· 67

<2023~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3~'27	'18~'22
실질GDP 성장률	1.1	2.0	3.0	2.6	2.3	2.5	2.1
명목GDP 성장률	2.2	4.2	5.1	4.8	4.4	4.6	3.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1	2.2	2.0	2.2	2.1	2.1	1.2
통관수출 증가율	△9.6	7.2	7.1	7.1	7.1	7.1	3.1
통관수입 증가율	△10.5	5.7	6.4	6.5	6.6	6.3	8.1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2.4	2.2	2.2	2.1	2.2	2.1
취업자수 증가(만명)	32.9	23.7	21.5	15.1	10.1	20.7	27.3
명목임금 상승률	2.9	3.0	3.4	3.2	3.2	3.2	3.5
국고채금리(3년)	3.5	3.0	2.8	2.6	2.5	2.9	1.8
회사채금리(3년, AA-)	4.3	3.6	3.3	3.2	3.1	3.5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국세수입 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3~'27	'18~'22
NABO 국세	340.3	361.4	390.4	416.6	438.8	6.6	7.8
소득세	114.2	124.8	137.6	149.1	159.3	8.7	11.1
법인세	79.1	75.0	82.8	89.7	96.4	5.1	9.9
부가가치세	74.4	81.1	86.9	92.0	96.5	6.7	3.9
기타[1)]	72.6	80.5	83.1	85.9	86.5	4.5	4.7
- 기타 소비세수	35.5	43.4	46.5	47.9	49.1	8.5	△2.3
- 기타 자산세수	37.2	37.0	36.6	38.0	37.4	0.2	14.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요 약

Ⅰ. 2023년 국세수입 전망

2023년 국세수입은 340.3조원으로, 2022년 395.9조원 대비 55.7조원(△14.1%) 감소, 본예산 400.5조원 대비 60.2조원(△15.0%) 낮을 전망

❑ 2023년 국세수입은 340.3조원으로, 법인영업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을 중심으로 2022년 대비 55.7조원(△14.1%) 감소하고, 본예산을 60.2조원(△15.0%) 하회할 전망

○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법인영업실적이 급감한 법인세(전년 대비 △24.5조원)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14.9조원)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감소 예상

❑ 소득세는 114.2조원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세 지속과 거래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와 이연세수의 기저효과 및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감소로 2022년 대비 14.6조원(△11.3%) 감소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58.6조원으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base effect), 임금상승률 둔화 및 제도변화(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2조원(2.1%) 증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1년) 4.6 ('22년) 4.9 ('23.1~7월) 2.2

– 특별급여 증가율(전년 대비, %): ('21년) 14.3 ('22년) 10.4 ('23.1~7월) △5.0

○ 종합소득세는 21.2조원으로, 2022년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의한 기저효과와 함께,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2022년 대비 2.7조원(△11.2%) 감소할 전망

– 2021년에 수납되었어야 할 약 2.7조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2022년에 수납됨에 따라 2023년 종합소득세수의 전년 대비 감소를 유발

-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4.8 ('22년) △5.8
-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판매액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5.8 ('22년) △0.3

○ 양도소득세는 17.4조원으로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더딘 거래량 회복에 따라 2022년 대비 14.9조원(△46.1%) 감소할 전망

-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22.4.) 105.1[1] ('23.8.) 95.5('22.4. 대비 △9.1%)
- 전국 주택 거래량(매매, 만호): ('21.10.~'22.8.) 58.2 ('22.10.~'23.8.) 46.5 (전년동기 대비 △20.0%)

❑ 법인세는 79.1조원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및 교역량 둔화로 인한 법인영업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2022년 대비 24.5조원(△23.6%) 감소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59.2조원으로,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대비 27.8조원(△31.9%) 감소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121.6 ('22년) △25.4
- 통관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25.7, ('22.上) 15.6, ('22.下) △2.4

○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19.9조원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3.3조원(19.8%) 증가할 전망

- 회사채 금리(3년물, AA-, %): ('22년) 4.2 ('23.1Q) 4.4 (2Q) 4.2 (3Q) 4.5

❑ 부가가치세는 74.4조원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통관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2022년 대비 7.3조원(△8.9%) 감소할 전망

○ 경기 부진 및 물가상승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전년 대비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 및 유가 하락 등으로 통관수입액이 감소세로 전환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3.1Q) 9.2 (2Q) 4.8
- 통관수입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2년) 18.9 ('23.1~9월) △12.5

○ 2023년 지방소비세율 1.6%p 인상(23.7 → 25.3%)과 2022년에 납부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의 영향(3.8조원)도 부가가치세수 감소의 요인으로 일부 작용

1)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국기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이다.

❑ 기타 소비세수[2]는 35.5조원으로, 통관수입액 감소 및 관세환급액 증가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관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대비 3.7조원(△9.4%) 감소할 전망

○ 관세는 7.1조원으로, 통관수입 감소와 관세 환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3.2조원(△30.9%) 감소할 전망

– 2022년 고유가 시기에 수입된 원유 등의 가공품이 금년에 수출됨에 따라 관세 환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0.9조원(54.2%) 증가

○ 이 밖에도 유류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1.1조원) 및 개별소비세(8.9조원)가 2022년 대비 각각 0.1조원(△0.5%), 0.4조원(△4.0%) 감소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3]는 37.2조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진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 제도변화 요인으로 인해 2022년 대비 5.7조원(△13.2%) 감소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3.7조원으로, 증여거래 감소로 인한 증여세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0.9조원(△5.9%) 감소할 전망

– 부동산 증여거래 건수 증감률(전년 대비, %): ('21년) △0.8 ('22년) △25.8 ('23년) △40.7

○ 종합부동산세는 4.9조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공시가격 하락 및 세율 인하 등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1.9조원(△27.6%) 감소할 전망

– 공시가격 증감률[4] 추이(%): ('21년) 주택 16.3, 토지 10.0
('22년) 주택 14.9, 토지 9.9 ('23년) 주택 △15.7, 토지 △5.7

○ 증권거래세는 5.8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권거래대금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인하(△0.03%p)됨에 따라 2022년 대비 0.5조원(△7.4%) 감소할 전망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 → 0.05, (코스닥) 0.23 → 0.20

---

2)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3)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4) 주택 공시가격 증감률은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감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을 의미한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5.9	400.5	340.3	△55.7	△14.1	△60.2	△15.0
일반회계	385.2	390.3	330.3	△54.9	△14.2	△60.0	△15.4
내국세	352.3	358.0	302.3	△50.0	△14.2	△55.7	△15.6
1. 소득세	128.7	131.9	114.2	△14.6	△11.3	△17.7	△13.4
2. 법인세	103.6	105.0	79.1	△24.5	△23.6	△25.9	△24.7
3. 상속세 및 증여세	14.6	17.1	13.7	△0.9	△5.9	△3.4	△19.9
4. 부가가치세	81.6	83.2	74.4	△7.3	△8.9	△8.8	△10.6
5. 개별소비세	9.3	10.2	8.9	△0.4	△4.0	△1.2	△12.3
6. 증권거래세	6.3	5.0	5.8	△0.5	△7.4	0.9	17.4
7. 인 지 세	0.8	0.8	0.8	△0.03	△3.9	△0.05	△5.9
8. 과년도수입	7.3	4.8	5.4	△2.0	△26.9	0.6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1.1	△0.1	△0.5	△0.1	△0.8
관 세	10.3	10.7	7.1	△3.2	△30.9	△3.6	△33.5
교 육 세	4.6	4.7	4.9	0.3	5.9	0.2	4.6
종합부동산세	6.8	5.7	4.9	△1.9	△27.6	△0.8	△13.8
특별회계	10.8	10.2	10.0	△0.8	△7.4	△0.2	△2.1
주 세	3.8	3.2	3.4	△0.3	△9.2	0.2	6.3
농어촌특별세	7.0	7.0	6.6	△0.4	△6.4	△0.4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Ⅱ. 2024년 국세수입 전망

2024년 국세수입은 361.4조원으로,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대비 21.1조원 (6.2%)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 예산안[5] 367.4조원 보다는 6.0조원 낮을 전망

1.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2024년 국세수입은 361.4조원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6] 대비 21.1조원(6.2%) 증가할 전망

○ 주요 세목 중 2024년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2023년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는 세수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소득세는 124.8조원으로,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10.7조원(9.3%) 증가 예상

○ 근로소득세는 62.7조원으로,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세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대비 4.1조원(6.9%) 증가할 전망

– 임금근로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2년) 74.9 ('23년^{e}) 34.6 ('24년^{e}) 30.3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2년) 4.9 ('23년^{e}) 2.9 ('24년^{e}) 3.0

○ 종합소득세는 22.5조원으로, 전년의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이연세수의 기저효과가 해소되고, 경제회복에 따라 사업소득이 상승하여 2023년 대비 1.2조원(5.8%) 증가할 전망

– 명목/실질GDP 성장률(%): ('22년) 3.9/ 2.6 ('23년^{e}) 2.2 / 1.1 ('24년^{e}) 4.2 / 2.0

○ 양도소득세는 21.1조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3.8조원(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국 주택 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1.) △33.9 ('23.3.) △10.5 ('23.5.) △11.0 ('23.7.) △3.7 ('23.8.) 0.9

5) 이하 '예산안'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을 의미한다.
6) 이하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23.1.) 68 ('23.3.) 80 ('23.5.) 92 ('23.7.) 102 ('23.9.) 110

❑ 법인세는 75.0조원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법인영업실적 부진이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3년 대비 4.1조원(△5.2%) 감소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53.6조원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대비 5.6조원(△9.4%) 감소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2년)△25.4 ('23.上.) △56.5

— 증권사 컨센서스(코스피): 2023년 영업이익 159.4조원(전년 대비 △14.8%)

○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21.3조원으로, 법인 금융자산 증가와 높은 수준의 금리 영향으로 2023년 대비 1.4조원(7.3%) 증가할 전망

— 법인 금융자산 추이(전년 대비, %): ('22년) 3.2 ('23년^{e}) 3.4 ('24년^{e}) 5.7

— 회사채금리 추이(3년물, AA-, %): ('22년) 4.2 ('23년^{e}) 4.3 ('24년^{e}) 3.6

❑ 부가가치세는 81.1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함께 통관수입의 증가 전환으로 2023년 대비 6.7조원(9.1%)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와 물가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감소하였던 통관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 대비, %): ('23년^{e}) 5.7 ('24년^{e}) 4.6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23년^{e}) 3.4 ('24년^{e}) 2.4

— 통관수입 증감률(전년 대비, %): ('23년^{e}) △10.5 ('24년^{e}) 5.7

○ 2020년부터 이어진 지방소비세율 조정이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전년 대비 감소요인 해소

— 지방소비세율 추이(%): ('21년) 21.0 ('22년) 23.7 ('23년 이후) 25.3

❑ 기타 소비세수는 43.4조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지표 개선 등으로 2023년 전망(35.5조원) 대비 8.0조원(22.4%) 증가할 전망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15.3조원으로,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와 2021년부터 이어진 유류세율 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2023년 대비 4.2조원(38.4%) 증가 예상

○ 개별소비세는 10.1조원으로,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소비 증가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1.2조원(12.9%) 증가할 전망

○ 관세는 8.7조원으로, 통관수입액 증가와 2023년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023년 대비 1.6조원(22.1%)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37.0조원으로, 자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1조원(△0.4%) 감소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4.0조원으로, 자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자산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증여거래 둔화세 지속 전망에 따라 2023년 대비 0.3조원(2.2%) 증가에 그칠 전망

○ 증권거래세는 5.2조원으로,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0.02%p)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7조원(△11.7%) 감소할 전망

– 증권거래세율 변화(%): 코스피 0.05 → 0.03, 코스닥 0.20 → 0.18

○ 종합부동산세는 4.0조원으로, 2024년 공시가격의 상승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에 수납될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축소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9조원(△18.4%) 감소할 전망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0조원으로 공시가격 하락(주택 △15.7%, 토지 △5.7%) 및 제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전망(6.7조원) 대비 2.7조원(△40.7%) 감소할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할 경우 다음연도 6월까지 납부를 허용(「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7]

7)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추이(조원): ('21년) 1.1, ('22년) 2.0, ('23년) 1.6, ('24년e) 1.0
(단, 다음연도 1~6월간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액을 전부 분납분이라고 가정)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40.3	367.4	361.4	21.1	6.2	△6.0	△1.6
일반회계	330.3	356.2	350.5	20.2	6.1	△5.6	△1.6
내국세	302.3	321.7	316.7	14.4	4.8	△5.0	△1.5
1. 소득세	114.2	125.8	124.8	10.7	9.3	△1.0	△0.8
2. 법인세	79.1	77.7	75.0	△4.1	△5.2	△2.7	△3.5
3. 상속세 및 증여세	13.7	14.7	14.0	0.3	2.2	△0.6	△4.3
4. 부가가치세	74.4	81.4	81.1	6.7	9.1	△0.3	△0.4
5. 개별소비세	8.9	10.2	10.1	1.2	12.9	△0.1	△0.9
6. 증권거래세	5.8	5.4	5.2	△0.7	△11.7	△0.2	△4.2
7. 인 지 세	0.8	0.9	0.9	0.1	11.8	0.01	0.9
8. 과년도수입	5.4	5.7	5.6	0.3	5.3	△0.1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15.3	4.2	38.4	△0.02	△0.2
관 세	7.1	8.9	8.7	1.6	22.1	△0.2	△2.2
교 육 세	4.9	6.2	5.8	0.9	18.1	△0.4	△5.8
종합부동산세	4.9	4.1	4.0	△0.9	△18.4	△0.1	△2.2
특별회계	10.0	11.2	10.8	0.9	8.6	△0.3	△3.1
주 세	3.4	3.6	3.5	0.1	2.6	△0.1	△1.9
농어촌특별세	6.6	7.6	7.3	0.8	11.7	△0.3	△3.7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67.4조원)을 6.0조원(△1.6%) 하회할 전망

○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 명목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 전망을 정부 전망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달리 교역조건의 악화 후 개선을 반영하여 명목 GDP 성장률을 정부 대비 2023년 1.2%p, 2024년 0.7%p 낮게 전망
- 추가적으로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 국세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1.1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한 데 일부 기인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정부	NABO	정부	NABO
명목GDP 성장률 (실질성장률)	3.9 (2.6)	3.4 (1.4)	2.2 (1.1)	4.9 (2.4)	4.2 (2.0)
민간소비 증가율	4.1	2.5	2.4	2.2	2.2
설비투자 증가율	△0.9	△1.2	0.6	2.5	4.5
건설투자 증가율	△2.8	0.6	1.0	0.2	0.2
경상수지	298	230	280	450	360
통관수출 증가율	6.1	△6.6	△9.6	8.8	7.2
통관수입 증가율	18.9	△8.6	△10.5	3.0	5.7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3.3	3.4	2.3	2.4
취업자수 증감	82	32	33	18	24
명목임금 상승률	4.9	2.9	2.9	3.8	3.0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세목별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과의 차이가 큰 세목은 법인세(2.7조원), 양도소득세(1.3조원),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등
- 법인세(2.7조원)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하반기 일부 업종의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도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하반기 법인실적이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제
  ※ ’23년 상반기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56.5
  상장법인 증권사 영업이익 증감률 컨센서스(’23.10.12. 기준, %):
  전산업 △14.8, 전기전자 △86.4, 화학 △17.4, 철강금속 △8.0

– 양도소득세(1.3조원)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부동산 거래량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자산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회복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함에 따라 차이 발생

※ 부동산 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1.) 주택 △33.9, 토지 △48.8, ('23.8.) 주택 0.9, 토지 △23.2

–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증권거래세(0.2조원) 등 자산세수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산수요를 높게 전망함에 따라 차이 발생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4 예산안 (A)	증감률 (2023 전망[1] 대비)	2024 전망 (B)	증감률 (2023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67.4	7.6	361.4	6.2	△6.0	△1.6
일반회계	356.2	7.6	350.5	6.1	△5.6	△1.6
내국세	321.7	6.1	316.7	4.8	△5.0	△1.5
1. 소득세	125.8	10.2	124.8	9.3	△1.0	△0.8
2. 법인세	77.7	△2.5	75.0	△5.2	△2.7	△3.5
3. 상속세 및 증여세	14.7	6.2	14.0	2.2	△0.6	△4.3
4. 부가가치세	81.4	10.2	81.1	9.1	△0.3	△0.4
5. 개별소비세	10.2	13.7	10.1	12.9	△0.1	△0.9
6. 증권거래세	5.4	△16.7	5.2	△11.7	△0.2	△4.2
7. 인지세	0.9	9.8	0.9	11.8	0.01	0.9
8. 과년도수입	5.7	5.5	5.6	5.3	△0.1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41.4	15.3	38.4	△0.02	△0.2
관세	8.9	22.7	8.7	22.1	△0.2	△2.2
교육세	6.2	17.9	5.8	18.1	△0.4	△5.8
종합부동산세	4.1	△11.9	4.0	△18.4	△0.1	△2.2
특별회계	11.2	8.9	10.8	8.6	△0.3	△3.1
주세	3.6	2.4	3.5	2.6	△0.1	△1.9
농어촌특별세	7.6	12.2	7.3	11.7	△0.3	△3.7

주: 1) 2023년 9월 정부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Ⅲ.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

1.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여 이전 5년(2018~2022년)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7.8%를 하회할 전망

○ 이전 5년과 비교하여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국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탄성치가 낮을 것으로 예상

–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에 의한 자산수요 감소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의 보유나 거래와 관련된 세수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데 기인

❑ 소득세는 2023년 114.2조원에서 2027년 159.3조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률 및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 추이에 따라 이전 5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하여 이전 5년 대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양도소득세 연평균 증가율(%): ('18~'22년) 15.6 → ('23~'27년) 9.2

❑ 법인세는 2023년 79.1조원에서 2027년 96.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법인실적 악화가 이어지며 법인세 전망의 베이스가 낮아짐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둔화

–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 ('18~'22년) 9.9 → ('23~'27년) 5.1

○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세수감소형 제도변화도 세입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부가가치세는 2023년 74.4조원에서 2027년 96.5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에 따라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세 연평균 증가율(%): ('18~'22년) 3.9 → ('23~'27년) 6.7

❑ 기타 세목은 2023년 72.6조원에서 2027년 86.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

○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5.5조원에서 2027년 49.1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높은 금리수준에 따른 자산시장 경기 부진과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2023년 37.2조원에서 2027년 37.4조원으로 연평균 0.2% 증가에 그칠 전망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3~'27	'18~'22
국세수입	340.3	361.4	390.4	416.6	438.8	6.6	7.8
소득세	114.2	124.8	137.6	149.1	159.3	8.7	11.1
법인세	79.1	75.0	82.8	89.7	96.4	5.1	9.9
부가가치세	74.4	81.1	86.9	92.0	96.5	6.7	3.9
기타[1)]	72.6	80.5	83.1	85.9	86.5	4.5	4.7
– 기타 소비세수	35.5	43.4	46.5	47.9	49.1	8.5	△2.3
– 기타 자산세수	37.2	37.0	36.6	38.0	37.4	0.2	14.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3~2027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23년 341.4조원에서 2027년 444.9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정부보다 1.1~10.9조원 낮고, 5년 합계 30.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명목GDP를 높게 전망한 것 등에 주로 기인

–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은 2023년 2.2%(정부전망 대비 △1.2%p), 2024년 4.2%(△0.7%p)로 정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나, 2023~2024년의 베이스 차이로 전체적인 명목GDP 레벨 수준은 정부가 높음

※ 명목GDP 전망(조원): (NABO) ’25년 2,421, ’26년 2,538, ’27년 2,651
(정부) ’25년 2,454, ’26년 2,564, ’27년 2,672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40.3 (△14.1)	361.4 (6.2)	390.4 (8.0)	416.6 (6.7)	438.8 (5.3)	(6.6)
	명목GDP 성장률	2.2	4.2	5.1	4.8	4.4	(4.6)
정부	국세수입	341.4 (△13.8)	367.4 (7.6)	401.3 (9.2)	423.2 (5.5)	444.9 (5.1)	(6.8)
	명목GDP 성장률	3.4	4.9	4.6	4.4	4.2	(4.6)
NABO – 정부		△1.1	△6.0	△10.9	△6.6	△6.1	[△30.7]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Ⅰ. 2023년 국세수입 전망

1.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0월 현재 시점의 거시경제 여건과 2023년 8월까지의 국세수입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국세수입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하에서는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 여건과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거시경제 여건[1)]

2023년 우리 경제는 상반기까지 수출 부진 및 대내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가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 진입하며 수출 감소세 및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둔화 등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전년 대비 2.6% 성장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9% 성장하며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가 해제 및 소비심리 개선[2)] 등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 증가율이 둔화되어 연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2023년 상반기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안정화 및 수요 감소로 주요 생산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함에 따라 투자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0.6% 수준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대외거래는 통관수출액의 경우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 및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액의 경우에도 투자 부진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등 수입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동반되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3.10.)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소비자심리지수: ('23.1.) 90.7 → ('23.3.) 92.0 → ('23.5.) 98.0 → ('23.7.) 103.2

소비자물가는 소비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과 환율 및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인해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다. 다만, 하반기에는 수입물가 하락 및 전기·가스요금 인상시기 지연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축소됨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어 연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기조 지속으로 고금리 흐름이 유지됨에 따라 국고채(3년) 및 회사채(3년, AA-) 금리가 각각 2022년 3.2%, 4.2%에서 2023년 상반기 3.4%, 4.3%로 상승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되어 2023년 연평균 국고채금리(3년)는 3.5%, 회사채금리(3년, AA-)는 4.3% 수준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는 보건·복지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 및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 81.6만명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3년 연간으로는 32.9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표 1] 2023년 거시경제 여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실질GDP 성장률	2.6	0.9	1.3	1.1
민간소비	4.1	3.1	1.7	2.4
건설투자	△2.8	1.8	0.3	1.0
설비투자	△0.9	5.3	△3.7	0.6
경상수지(억달러)	298	37	243	280
통관수출 증가율	6.1	△12.4	△6.8	△9.6
통관수입 증가율	18.9	△7.7	△13.3	△10.5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3	0.9	1.3	1.1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4.0	2.7	3.4
취업자수 증감(만명)	81.6	37.2	28.6	32.9
실업률	2.9	3.0	2.4	2.7
명목임금 상승률	4.9	2.4	3.3	2.9
국고채금리(3년)	3.2	3.4	3.5	3.5
회사채금리(3년, AA-)	4.2	4.3	4.3	4.3
명목GDP 성장률	3.9	1.8	2.7	2.2

주: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는 실적치, 2023년 하반기 및 연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앞서 금년의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241.6조원으로 전년동기(289.3조원) 대비 47.6조원(△16.5%) 감소하였다.

월별로 국세수입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월까지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22.5%)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2022년 법인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대부분의 세목이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8월까지 이어졌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2월 △22.5%에서 8월 △16.5%로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표 2] 2023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2	49.7	70.0	111.1	167.9	196.6	218.3	261.0	289.3
2023	42.9	54.2	87.1	134.0	160.2	178.5	217.6	241.6
차이 (%)	△6.8 (△13.6)	△15.7 (△22.5)	△24.0 (△21.6)	△33.9 (△20.2)	△36.4 (△18.5)	△39.7 (△18.2)	△43.4 (△16.6)	△47.6 (△16.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8월까지 77.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3.9조원(△15.3%) 감소하였다. 소득세 감소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자산가격 둔화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2.3조원(△50.4%) 감소하였다. 종합소득세도 세정지원[3]에 따른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원(△18.8%) 감소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0.3조원(0.7%)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4]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인세는 8월까지 62.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0.2조원(△24.5%) 감소하

3)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유예('21.11. → '22.2)
4)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상향: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여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3~5월 확정신고분이 2022년 법인 영업이익 등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조원 감소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까지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8월 중간예납 세액도 전년동월 대비 3.5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8월까지 51.9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6.4조원(△10.9%) 감소하였다. 완만한 민간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통관수입액 감소와 지방소비세율이 추가로 인상[5]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 중에는 통관수입액 감소 및 수출지연에 따른 환급액 증가로 관세가 8월 누적 2.8조원(△38.4%)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율 인하[6]의 영향으로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0.5조원(△10.1%) 감소하였다. 그밖에 2021년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동기 대비 0.5조원(△6.5%) 감소하여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표 3] 2023년 8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1~8월 누적				'22	'23
	'22.8	'23.8	증감액	'22.8	'23.8	증감액	증감률	실적	예산
국세	28.3	24.0	△4.3	289.3	241.6	△47.6	△16.5	395.9	400.5
ㅇ 소득세	10.4	9.2	△1.2	91.1	77.2	△13.9	△15.3	128.7	131.9
- 종합소득	1.6	0.9	△0.6	16.3	13.3	△3.1	△18.8	23.9	24.7
- 양도소득	3.8	2.5	△1.2	24.5	12.2	△12.3	△50.4	32.2	29.7
- 근로소득	4.1	4.5	0.4	39.4	39.7	0.3	0.7	57.4	60.6
ㅇ 법인세	17.0	13.9	△3.1	82.5	62.3	△20.2	△24.5	103.6	105.0
ㅇ 상속·증여세	1.1	1.2	0.1	11.1	10.2	△0.9	△8.1	14.6	17.1
ㅇ 부가가치세	△4.6	△4.8	△0.2	58.3	51.9	△6.4	△10.9	81.6	83.2
ㅇ 증권거래세	0.5	0.7	0.2	4.7	4.2	△0.5	△10.1	6.3	5.0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0.9	1.0	0.2	7.7	7.2	△0.5	△6.5	11.1	11.1
ㅇ 관세	0.9	0.6	△0.3	7.4	4.5	△2.8	△38.4	10.3	10.7
ㅇ 기타	2.1	2.2	0.2	26.4	23.9	△2.4	△9.2	39.7	36.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지방소비세율: ('20~'21년) 21% → ('22년) 23.7% → ('23년~) 25.3%
6)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코스피 ('22년) 0.08 → ('23년) 0.05 /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국세수입을 340.3조원으로, 2022년(395.9조원) 대비로는 55.7조원(△1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부동산 경기도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 전년 대비 각각 58.5조원, 51.9조원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던 국세수입은 2023년에는 전년(395.9조원) 대비 55.7조원(△1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국세수입의 급감에 따라 2023년 국세수입은 본예산(400.5조원) 대비로는 60.2조원(△15.0%)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3년 9월 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341.4조원)보다 1.1조원(△0.3%)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4.2조원으로, 2022년(이하 '전년') 128.7조원 대비 14.6조원(△1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감소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매매 거래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9조원(△4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2년 세정지원 이연세수의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부진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조원(△11.2%)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전년도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제도변화, 임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조원(2.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는 79.1조원으로, 전년(103.6조원) 대비 24.5조원(△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영업실적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금리 상승에 따른 법인 이자소득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74.4조원으로, 전년(81.6조원) 대비 7.3조원(△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 및 유가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총괄

하락에 따른 통관수입액의 감소세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이 23.7%에서 25.3%로 1.6%p 인상된 제도적 요인과 2022년의 세정지원 이연세수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하였다.

기타 소비세수[7] 중 관세는 통관수입 감소 및 관세환급액 증가로 전년 대비 3.2조원(△30.9%)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유류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전년 대비 0.1조원(△0.5%), 0.4조원(△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산세수[8] 중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 부진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원(△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 역시 자산시장 침체로 증여거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 대비 0.9조원(△5.9%)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거래세율이 인하(△0.03%p)됨에 따라 전년 대비 0.5조원(△7.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국세수입은 본예산(400.5조원) 대비로는 60.2조원(△15.0%), 정부가 재추계('23.9.)한 전망(341.4조원) 대비로는 1.1조원(△0.3%)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추계한 전망치와의 차이가 큰 세목은 증권거래세와 법인세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금년 9~10월 중 주식시장의 부진한 흐름을 반영함에 따라 정부 재추계 결과보다는 0.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4.8%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세가 9~1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 재추계 결과보다는 0.5조원 낮을 것으로 보인다.

---

7)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8)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표 4]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95.9	400.5	340.3	△55.7	△14.1	△60.2	△15.0
일반회계	385.2	390.3	330.3	△54.9	△14.2	△60.0	△15.4
내국세	352.3	358.0	302.3	△50.0	△14.2	△55.7	△15.6
1. 소득세	128.7	131.9	114.2	△14.6	△11.3	△17.7	△13.4
2. 법인세	103.6	105.0	79.1	△24.5	△23.6	△25.9	△24.7
3. 상속세 및 증여세	14.6	17.1	13.7	△0.9	△5.9	△3.4	△19.9
4. 부가가치세	81.6	83.2	74.4	△7.3	△8.9	△8.8	△10.6
5. 개별소비세	9.3	10.2	8.9	△0.4	△4.0	△1.2	△12.3
6. 증권거래세	6.3	5.0	5.8	△0.5	△7.4	0.9	17.4
7. 인 지 세	0.8	0.8	0.8	△0.03	△3.9	△0.05	△5.9
8. 과년도수입	7.3	4.8	5.4	△2.0	△26.9	0.6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1.1	△0.1	△0.5	△0.1	△0.8
관 세	10.3	10.7	7.1	△3.2	△30.9	△3.6	△33.5
교 육 세	4.6	4.7	4.9	0.3	5.9	0.2	4.6
종합부동산세	6.8	5.7	4.9	△1.9	△27.6	△0.8	△13.8
특별회계	10.8	10.2	10.0	△0.8	△7.4	△0.2	△2.1
주 세	3.8	3.2	3.4	△0.3	△9.2	0.2	6.3
농어촌특별세	7.0	7.0	6.6	△0.4	△6.4	△0.4	△6.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3년 소득세는 114.2조원으로, 2022년(128.7조원) 대비 14.6조원(△1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 131.9조원을 17.7조원(△13.4%) 하회하는 수준이다.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근로소득세, 소득세 기타
문석휘 추계세제분석관(slugnoid@assembly.go.kr, 6788-4669)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감소는 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에 기인한다. 이 외에 세정 지원으로 2022년에 수납된 이연세수의 기저효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폭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효과[9] 및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제한될 전망이다.

[표 5] 2023년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28.7	131.9	114.2	△14.6	△11.3	△17.7	△13.4
신고분	56.2	54.4	38.6	△17.5	△31.2	△15.8	△29.1
종합소득세	23.9	24.7	21.2	△2.7	△11.2	△3.5	△14.1
양도소득세	32.2	29.7	17.4	△14.9	△46.1	△12.3	△41.5
원천분	72.6	77.4	75.6	3.0	4.1	△1.9	△2.4
이자소득세	2.6	2.7	4.5	1.9	72.1	1.8	67.9
배당소득세	4.2	5.0	3.9	△0.3	△6.7	△1.1	△22.0
사업소득세	4.1	4.5	4.4	0.3	6.4	△0.2	△4.2
근로소득세	57.4	60.6	58.6	1.2	2.1	△2.0	△3.3
연금소득세	0.4	0.5	0.5	0.1	25.0	0.0	△6.8
기타소득세	2.3	2.5	2.5	0.2	10.6	0.0	1.5
퇴직소득세	1.6	1.6	1.2	△0.4	△27.0	△0.4	△27.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9)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하고, 총급여 1.2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제도 개정에 따라 2023년 소득세가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소득세

2023년 종합소득세는 21.2조원으로, 2022년(23.9조원) 대비 2.7조원(△1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 24.7조원을 3.5조원(△14.1%) 하회한다. 이러한 감소세는 2022년 수납된 세정지원 이연세수의 기저효과[10],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3.3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3.1조원(△18.8%)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까지 납부된 이연세수(2.7조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 0.6조원(△3.8%) 감소하는 모습이다.

2023년 종합소득세의 세원이 되는 개인영업잉여 등의 증가세가 2022년[11]부터 둔화 혹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국민계정상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의 증감률은 2021년 4.8%에서 2022년 △5.3%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1.3%로 둔화(2021년 2.5%)하고, 준법인기업의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배당금을 의미[12]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준법인기업소득인출[13]'의 증가율이 2021년 10.2%에서 2022년 △19.7%로 급감한 데 기인한다.

---

10) 2022년 종합소득세 수납실적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21.11. → '22.2.)함에 따른 이연세수 2.7조원(정부 추정치)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수납실적에는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22.11. → '23.2.)함에 따른 이연세수 0.3조원(정부 추정치)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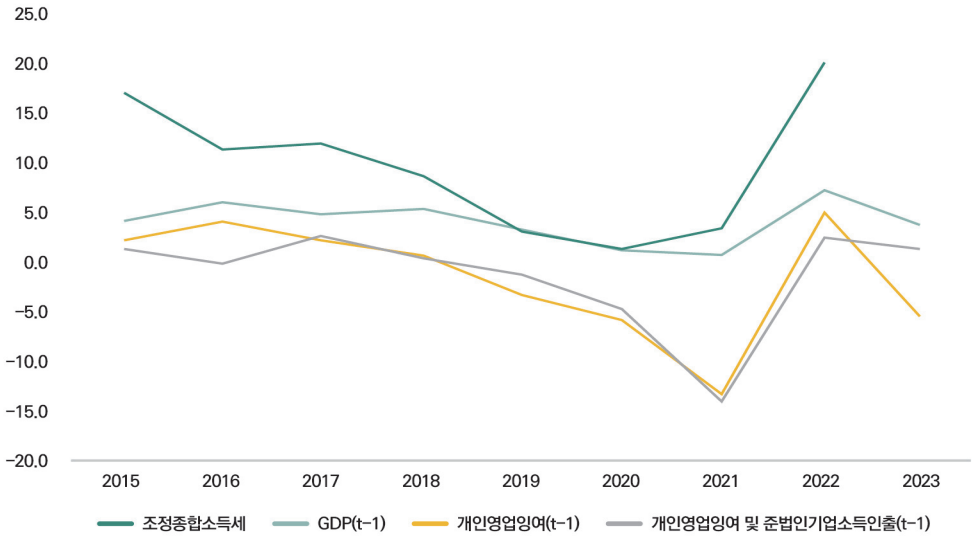
11)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나, 차년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됨에 따라 소득 변수와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12) 한국은행, OECD「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해설, 계간국민계정 2007년 제4호 통권 제31호, 2007, p.114

13) 김낙년(2022)에 따르면,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준법인으로 분류된 자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잉여를 인출하여 가계소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자영업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1] 종합소득세의 세원: 국민계정상 소득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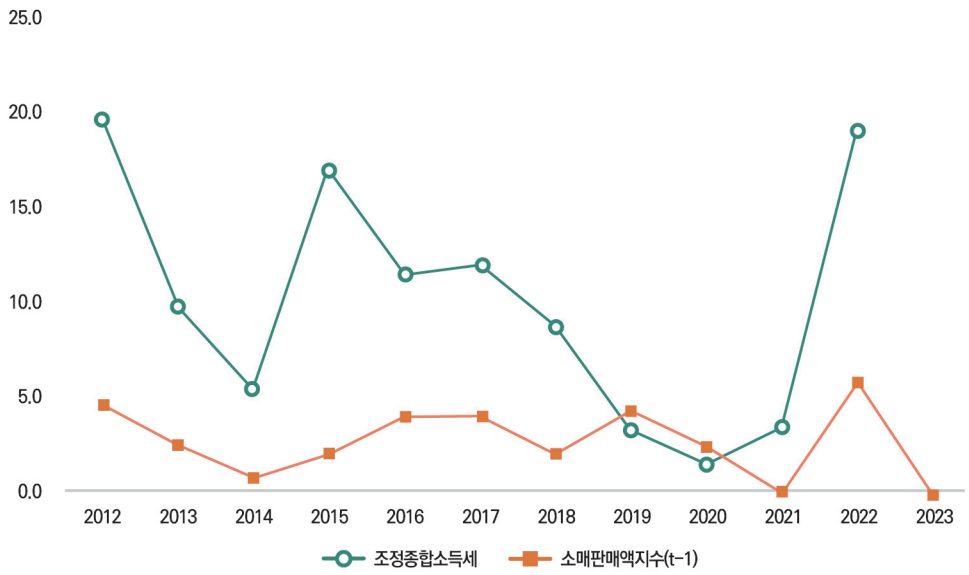
주: 1. 조정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 EITC·CTC 가산
2. GDP, 개인영업잉여,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명목 기준
3. (t−1)은 전년 귀속분을 당해 연도로 한 연도씩 시차를 조정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2022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을 시차를 조정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2023년 조정종합소득세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14]된다. 조정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의 증가율을 시차를 조정해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이들의 변동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매판매 추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판매액 증감률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귀속기준으로 2021년 5.8%에서 2022년 △0.3%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4) 참고로 국민계정의 명목민간소비는 통계청의 소매판매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22년 각 항목의 증가율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소매판매지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국민계정의 명목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판매액을 측정하는 반면, 국민계정의 민간소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로 상품 및 서비스업 전체를 반영한다. 국민계정 민간소비를 재화와 서비스로 각각 나누어보면, 귀속기준으로 재화는 2021년 6.8%에서 2022년 4.7%로 증가율이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는 2021년 6.4%에서 2022년 1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가계소비지출(명목민간소비) 증가율이 2021년 6.3%에서 2022년 8.8%로 나타난다.

[그림 2]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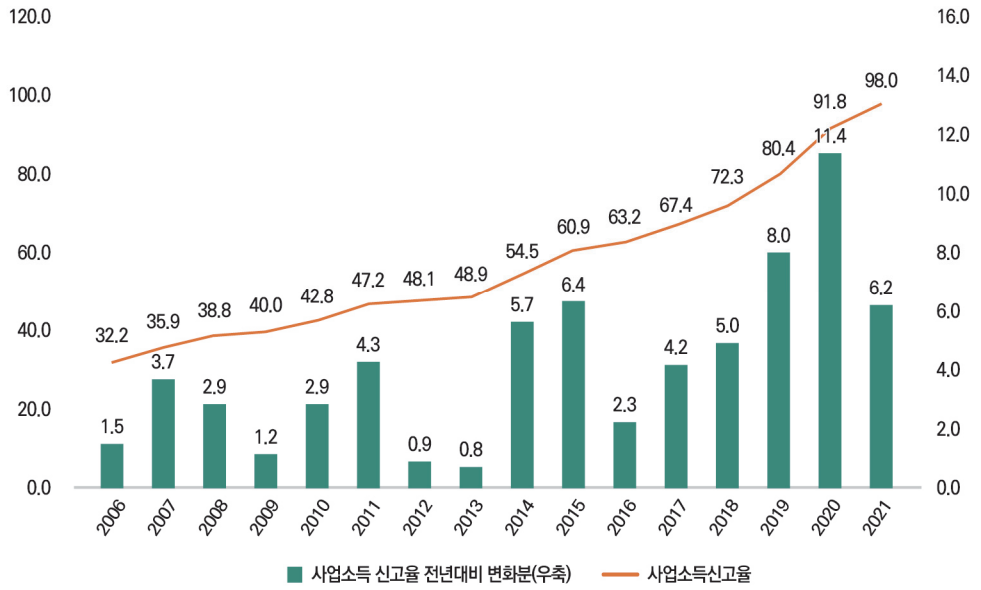
주: 1. 조정 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 EITC·CTC 가산
2. (t-1)은 전년 귀속분을 당해 연도로 한 연도씩 시차를 조정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던 사업소득신고율[15]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2023년 종합소득세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소득신고율은 2019년 전년 대비 8.0%p, 2020년 11.4%p, 2021년 6.2%p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소득신고율의 상승은 과세당국에 의한 사업소득 포착률이 높은 국내온라인 거래액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은데, 이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마켓 플랫폼, 간편결제 시스템의 등장으로 온라인 거래환경이 개선된 데에 기인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와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가 가속화[16] 되어 왔다. 다만 사업소득신고율이 과세표준 양성화 지표로 2021년 기준 98%에 육박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5) 사업소득 신고율은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대비 국세통계의 사업부동산소득 비율로 추정하였다.
16) KIS Special Report, [소비분석]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있나? - 주요 소비재산업 · 유통 채널 수요 및 실적 전망, 한국신용평가, 2023.9.25

[그림 3]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과표양성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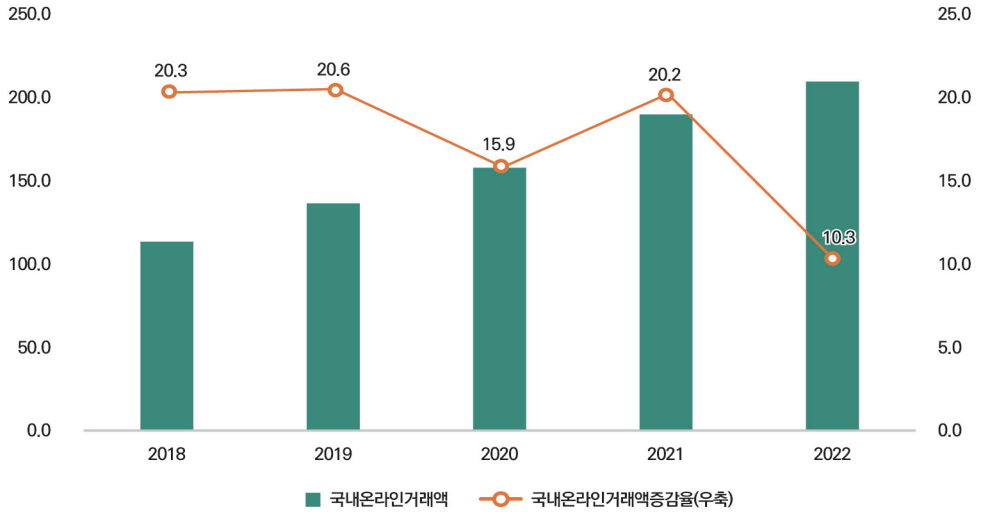
(단위: %, %p)



주: 사업소득신고율= 사업부동산소득/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자료: 한국은행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4] 국내 온라인 거래액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가적으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환급액 증가도 2023년 종합소득세 증가세를 제약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모두채움 환급신고 안내를 2022년 4월부터 발송하고 있는데, 동 환급액은 2022년 5월 5,500억원에서 2023년 5월 8,23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게 모두채움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대상자의 약 96~97%가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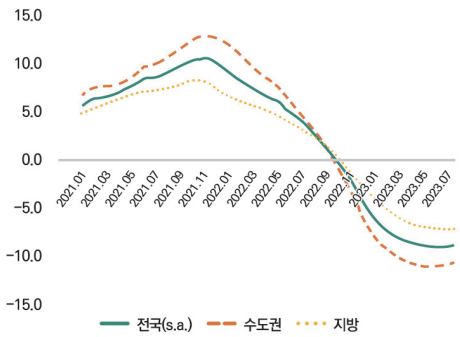
2023년 양도소득세는 17.4조원으로 2022년(32.2조원) 대비 14.9조원(△46.1%) 감소하고 2023년 본예산 29.7조 대비 12.3조원(△41.5%)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 12.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까지 징수된 24.5조원 대비 12.3조원(△50.4%) 감소하였다.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세가 올해도 일정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아 2023년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가격 하락세가 2023년까지 지속되었다. 2023년 8월 전국 기준 주택 종합 유형 매매가격지수는 95.5로 최고점인 2022년 4월의 105.1보다 9.1% 낮은 수준이며 그 감소폭은 수도권에서 11.2%로 더욱 컸다.[17] 토지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2년 11월 전년동기 대비 감소(△0.01%)로 전환된 뒤 2023년 1월(△0.04%), 2월(△0.02%)까지 감소세를 이어나갔으며 2023년 3월부터 전년동기 대비 상승(0.01%)으로 전환되었으나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2022.4.) 106.5 (2023.8.) 94.5(△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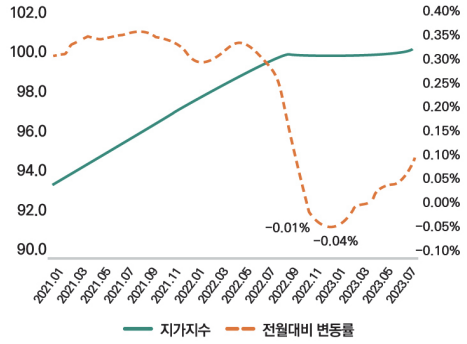
[그림 5]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단위: %)



[그림 6] 최근 월간 지가지수 및 변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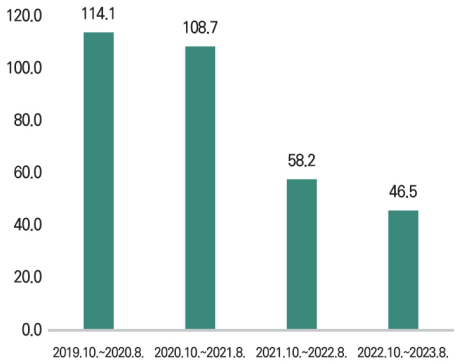


주: 매매가격지수는 종합주택 유형에 대한 정보이며 2021.6.=100,
지가지수는 전국 기준이며 2023.6.=100, 변동률은 전월 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하반기의 소폭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전 수준의 거래량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시점을 감안한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2023년 8월 누적 매매거래량은 46.5만호로 2022년의 58.2만호와 비교해도 20.0% 감소한 수준이다. 토지 또한 2022년 10월~2023년 8월 누적 매매거래량이 110.7만필지로 2022년 동기의 149.5만필지에 비해 26.0%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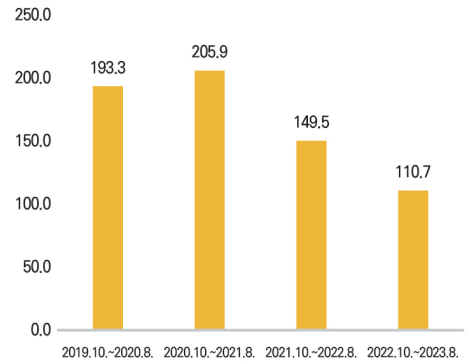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단위: 만호)



[그림 8] 연도별 토지 매매거래량

(단위: 만필지)



주: 1. 모든 연도는 전년도 10월~당해년도 8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월별 부동산 거래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더하여 최근 동결되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에 따라 차입 부담이 여전히 크고 역전세 리스크 상존 등 하방압력 역시 올해 중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분양가 상한가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세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주식분의 경우 2022년도 12월 누적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대금이 3,913조원(전년동기 대비 △42.2.%)을 기록하면서 2023년도 양도소득세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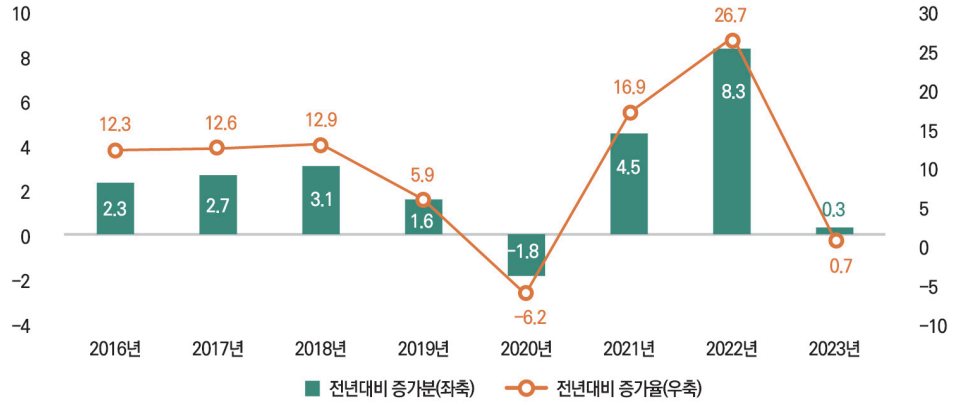
근로소득세

2023년 근로소득세는 58.6조원으로, 2022년(57.4조원) 대비 1.2조원(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 60.6조원을 2.0조원(△3.3%)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세수전망은 8월까지 국세수입과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8월 누적 39.7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3조원(0.7%) 증가하였다. 세수증가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2021~2022년을 제외하더라도 과거의 증가율('16~'18년: 12.3~12.9%)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로 임금상승률 둔화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연도별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의 전년대비 증감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명목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3년 7월까지 전년동기(5.5%) 대비 3.3%p 낮은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기업실적부진[18]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특별급여가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금년 4월 이후 감소세가 확대[19]되며 7월(누적)까지 전년 대비 5.0% 감소(2022년의 경우 16.2%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 초과급여의 경우 전년동기(6.0%) 보다 3.7%p 낮은 2.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2021		2022		2023
	1~7월(누계)	연간	1~7월(누계)	연간	1~7월(누계)
전체	4.5	4.6	5.5	4.9	2.2
상용 정액급여	3.2	3.4	4.2	4.3	4.0
상용 초과급여	4.8	3.7	6.0	5.7	2.3
상용 특별급여	14.9	14.3	16.2	10.4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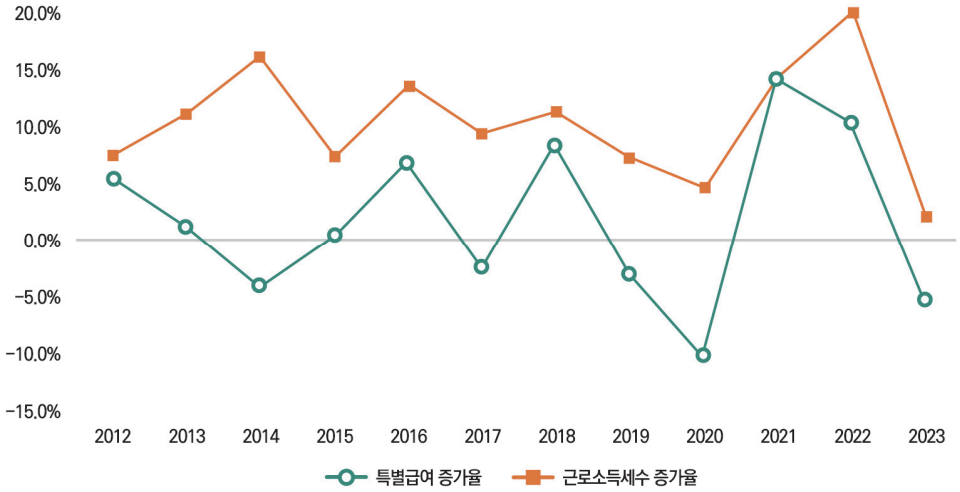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거 10년간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과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두 증가율의 증감 추이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급여 증가율이 상승하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특별급여 감소세가 확대되거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수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10년 중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변동 폭이 가장 컸던 2015년, 2021년, 2023년(전망치)의 경우 특별급여 증가율이 증가에서 감소로,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며 변동 폭을 확대시켰던 기간에 해당한다. 특별급여가 전년도 법인영업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법인영업이익 증가율과 다음연도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을 제외하고 증가율의 증감 추이가 유사한 데 반해, 2017년 이후에는 증가율 수준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법인영업이익(비금융법인 및 금융법인의 영업잉여)은 2021년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나 2022년은 4.5% 감소하였다.

19) 당월기준 월별 특별급여 증가율은 4월에서 7월까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5.8% → △3.9% → △8.3% → △10.5%로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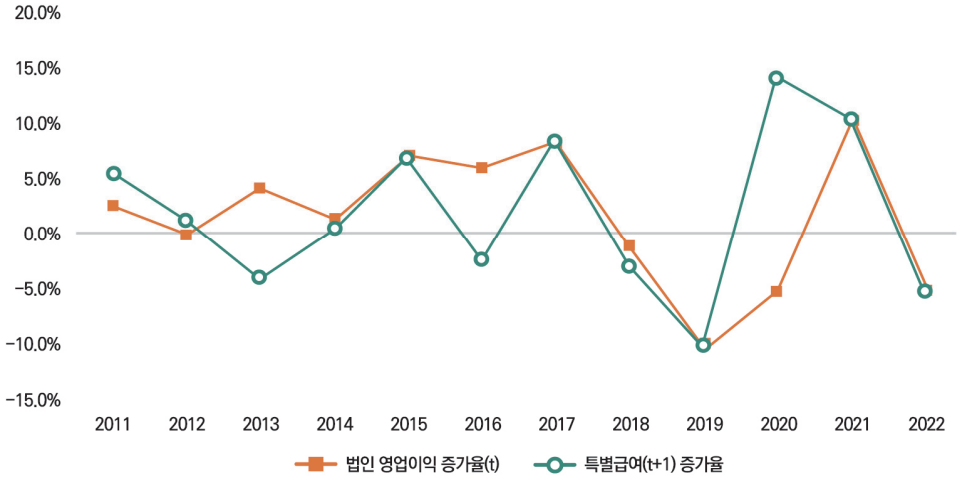
[그림 10]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주: 1. 근로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실적 활용
2. 2023년 특별급여 증가율은 2023년 7월(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2023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1] 당해연도 법인영업이익과 차년도 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



주: 2011~2022년 법인영업이익 증가율과 2012~2023년 특별급여 증가율로, 2023년 특별급여 증가율은 7월(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1~8월 취업자 수는 33.9만명(1.2%) 증가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1월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31.5만명(1.5%) 증가했으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50.6만명(3.2%) 증가해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 그러나 취업자 수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서비스업(보건 · 복지업, 숙박 · 음식업 등),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여성 및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서 증가를 주도해 이와 같은 고용의 증가가 근로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3.1/4	23.2/4	23.1~8월
전체	97	301	△218	369	816	397	346	339
여성	94	210	△137	202	436	346	342	324
남성	4	91	△82	166	381	51	4	15
60세 이상	234	377	375	330	452	453	388	391
20~59세	△95	△69	△557	29	357	△42	△19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 세목 중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소득세는 4.5조원으로, 전년(2.6조원) 대비 1.9조원(7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 2.7조원을 1.8조원(67.9%)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자소득세는 8월 누적 2.9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3조원(82.5%)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7월 0.5%에서 2023년 1월 3.5%까지 총 10차례 상승(+3.0%p)해 2023년 8월 현재까지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20) 2017년 이후 5년간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1.5%(31.4만명)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수는 3.2%(45.3만명) 증가했다.

배당소득세는 3.9조원으로, 전년(4.2조원) 대비 0.3조원(△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세는 8월 누적 3.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0.2조원(△4.7%) 감소하였는데, 배당소득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코스피 ·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액이 지난해보다 △6.7%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하반기에도 법인영업실적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당액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 밖에 사업소득세(4.4조원), 기타소득세(2.5조원), 퇴직소득세(1.2조원), 연금소득세(0.5조원)는 8월 실적의 증가세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법인세

2023년 법인세는 79.1조원으로, 2022년(103.6조원) 대비 24.5조원(△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105.0조원)을 25.9조원(△24.7%)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59.2조원으로 전년 대비 27.8조원(△31.9%) 감소하고, 본예산(87.1조원)을 27.9조원(△32.0%)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19.9조원으로 전년 대비 3.3조원(19.8%) 증가하여 본예산(17.9조원)을 1.9조원(10.9%)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8] 2023년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103.6	105.0	79.1	△24.5	△23.6	△25.9	△24.7
− 신고분	87.0	87.1	59.2	△27.8	△31.9	△27.9	△32.0
− 원천분	16.6	17.9	19.9	3.3	19.8	1.9	10.9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법인세 신고분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837) 법인세 원천분

2023년 8월까지 법인세 신고분은 49.0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2.6조원(△31.5%) 감소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신고분의 감소는 2022년 법인 영업실적의 악화로 금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분이 감소한 것과 이로 인해 8월 중간예납액도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21)22)]

[표 9] 2023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2	1.4	0.2	26.0	18.9	7.0	1.3	0.6	16.1	71.5
2023	0.2	0.2	19.8	9.4	5.4	1.4	△0.1	12.6	49.0
차이	△1.2	△0.1	△6.2	△9.4	△1.6	0.1	△0.7	△3.5	△22.6
(%)	(△84.2)	(△34.3)	(△23.8)	(△50.1)	(△22.9)	(7.9)	-	(△21.7)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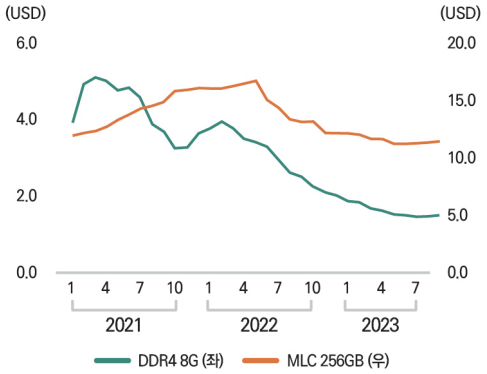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2022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위주로 대외거래 수요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전세계적인 IT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D램(DDR4 8GB)은 2022년 4월 3.47달러에서 12월에는 2.00달러로 42.2% 하락하였으며, 낸드(MLC 256GB)는 같은 기간 16.38달러에서 12.09달러로 26.2% 감소하였다. 그 결과 통관수출액은 2022년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 4분기는 통관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하며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21)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는 3~5월 당월기준 수납액을 살펴보면, 3월 6.2조원(△23.8%), 4월 9.4조원(△50.1%), 5월 1.6조원(△22.9%)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22) 법인세 중간예납은 8~10월에 납부가 이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용한 8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후 2023년 신고분 실적을 전망하였다. 2023년 8월 법인세는 당월기준 전년동월 대비 3.5조원(△21.7%) 감소한 12.6조원이 수납되었다.

[그림 12] 반도체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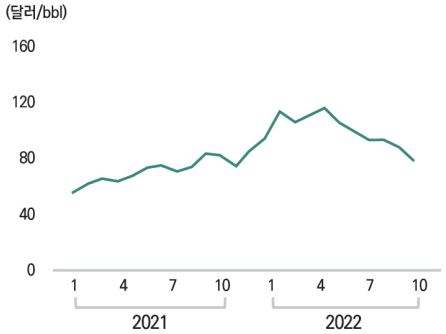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13] 통관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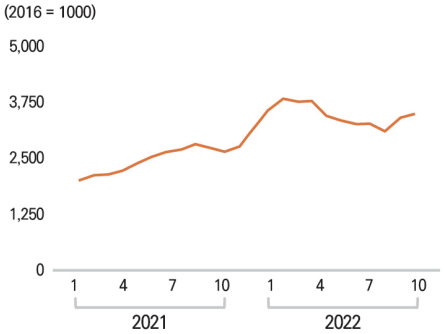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2022년 원유·광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도 법인영업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원자재의 가격은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유가의 상승은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2022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6.4달러로 2021년 69.3달러 대비 39.1% 상승하였고, 주요 광물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23]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24]

[그림 14] 원유(두바이유) 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or.kr)

[그림 15] 광물종합지수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or.kr)

23) 평균수입 규모 상위 15개 광종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수치화한 지수이다.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니켈, 철광석, 희토류, 리튬, 연, 알루미늄, 주석, 코발트, 몰리브덴 등)

24)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재료용 수입품에 대한 물가지수는 2021년 133.7에서 2022년 177.25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다.

이러한 반도체 가격 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기업이 주로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14.7%,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4%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을 비롯하여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건설업 순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25] 이러한 영업실적 부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비금융업 외부감사법인의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9.2%,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까지 납입된 법인세 신고분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액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법인 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것에 기인한다.

[표 10]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2018~2022년

(단위: 전년 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가증권 상장기업 (연결기준)	영업이익	0.3	△37.0	3.2	73.6	△14.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2	△50.0	9.4	121.6	△25.4
코스닥 상장기업 (연결기준)	영업이익	△11.6	4.6	12.1	39.7	0.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9	△5.3	5.4	115.2	△29.4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표 11] 외부감사법인(비금융업) 실적 증감률: 2018~2022년

(단위: 전년 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업경영분석	영업이익	△3.9	△25.6	0.1	53.8	△9.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0	△30.4	3.8	95.2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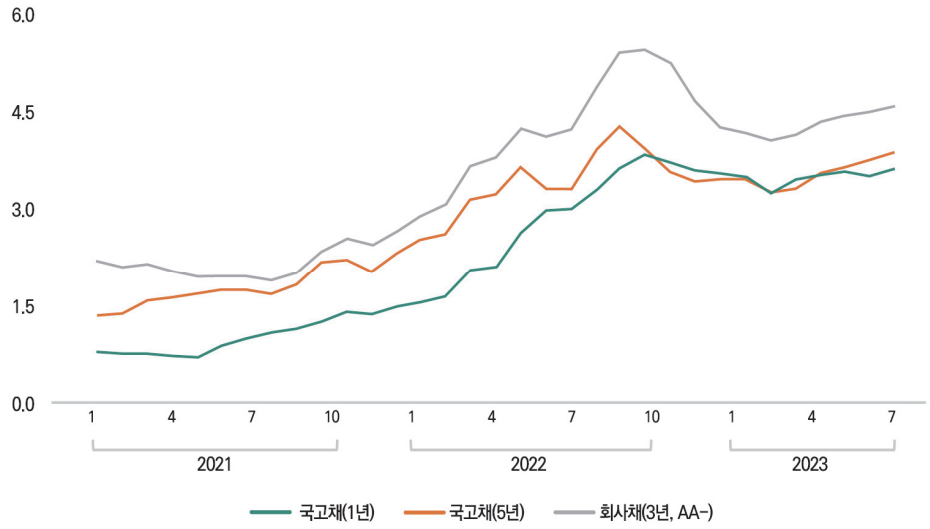
주: 2018~2021년은 비금융업의 법인세 신고법인, 2022년은 비금융업 외부감사법인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5) 2022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전년 대비 감소 상위 5개 업종(조원):
전기가스(△26.0), 전기전자(△16.7), 철강·금속(△5.6), 화학(△3.4), 건설(△0.7)

법인세 원천분은 8월 누적 기준 13.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3조원(21.3%)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의 금융자산증가 및 금리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사채금리(3년, AA-)는 2021년 연평균 2.1%에서 2022년 4.2%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4%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가 2023년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 법인세 원천분을 전망하였다.

[그림 16] 금리 추이: 2021.1.~ 2023.9.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3) 부가가치세

2023년 부가가치세는 74.4조원으로, 2022년(81.6조원) 대비 7.3조원(△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83.2조원)을 8.8조원(△10.6%)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세수전망은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최근의 민간소비 및 수입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부가가치세

[표 12] 2023년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81.6	83.2	74.4	△7.3	△8.9	△8.8	△10.6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1.9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6.4조원(△10.9%)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국내분 세수는 17.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원(△11.5%) 감소하였으며,[26] 수입분 세수는 34.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조원(△10.6%) 감소하였다.

최근의 부가가치세 부진은 통관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도 일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감소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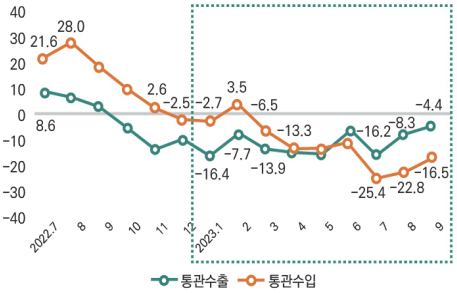
먼저 통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8월 누적 기준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통관수입은 2023년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하였다. 통관수입은 2022년 높은 실적을 기록한 후 2023년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통관수입이 통관수출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격의 하락 및 투자 부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27] 영향으로 2023년 8월 누적 기준 원자재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7.1%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자본재 수입은 6.6%, 소비재 수입은 5.2% 감소하였다.

26) 2023년 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세수감소금액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2022년에 납부된 이연세수(△3.4조원)를 포함하고 있다.

27) 두바이유($/Bbl, 에너지경제연구원): : ('22.1)83.5 ('22.8.)96.6 ('23.1)80.4 ('23.8.)86.5
유럽 천연가스($/mmbtu, World Bank): ('22.1)28.3 ('22.8.)70.0 ('23.1)20.2 ('23.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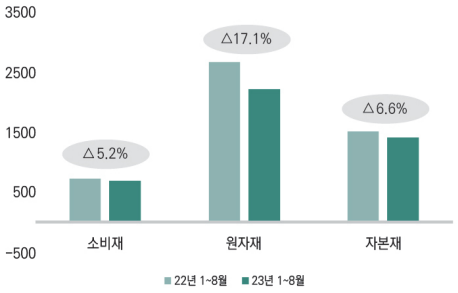
[그림 17] 통관수출입 추이

(단위: %)



[그림 18] 성질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2023년은 지방소비세율이 23.7%에서 25.3%로 1.6%p 인상된 제도적 요인도 부가가치세 감소에 기여하였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 규모는 2023년 8월 누적 기준 1.1조원 수준으로 추계된다. 8월까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한 규모이나,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수 8월 누적 기준 9.0%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 2023년 8월 누적 부가가치세 실적: 지방소비세 제외 vs. 포함

(단위: 조원, %)

	2022년 1~8월			2023년 1~8월		
	전체	국내분	수입분	전체	국내분	수입분
부가가치세 징수액(국세 기준)	58.3	19.5	38.8	51.9	17.3	34.6
- 증감률(국세 기준)	7.8	△22.3	33.8	△10.9	△11.5	△10.6
- 증감률(지방소비세 포함)[1]	11.5	△19.6	38.5	△9.0	△9.6	△8.7

주: 1) 금년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수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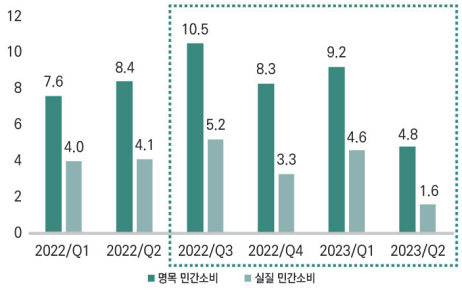
반면, 명목 민간소비는 2023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관수입 감소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민간소비 증가가 상쇄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2023년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실질 민간소비가 경기둔화와 함께 수요 분출 효과[28] 약화 등의 영향

28) 억눌렸던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으로 2022년 3분기 5.2%에서 2023년 2분기 1.6%로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022년 7월 6.3%에서 2023년 7월 기준 2.3%까지 둔화된 후 9월에는 3.7%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낮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상품소비 감소[29]와 서비스 소비 둔화[30] 등을 감안하면, 2023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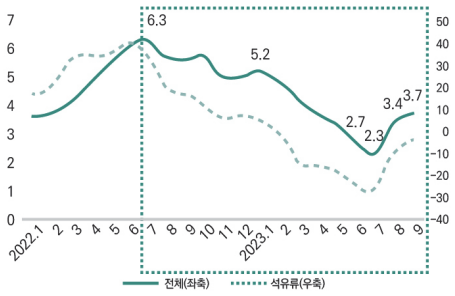
[그림 19]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단위: %)



[그림 2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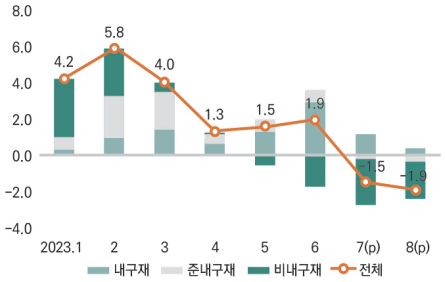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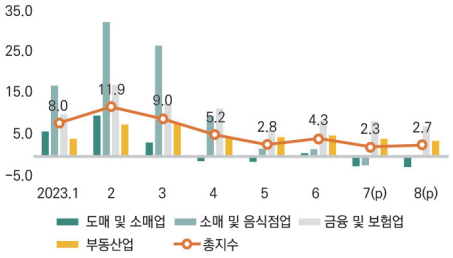
[그림 21] 소매판매액 증감률 추이

(단위: %)



[그림 22]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9) 소매판매액은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의 비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면서 7월 이후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30) 서비스산업생산지수의 경우 최근 서비스업 매출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지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최근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숙박 및 음식점업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전 대비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4) 기타 소비세수

2023년 부가가치세 외 기타 소비세수[31]는 35.5조원으로, 2022년(39.2조원) 대비 3.7조원(△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예산(40.0조원)을 4.5조원(△11.3%)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수감소 전망은 주로 통관수입의 감소 및 관세환급액 증가로 인하여 관세가 2022년 대비 3.2조원 감소(△30.9%)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소폭 감소하였다.

[표 14] 2023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9.2	40.0	35.5	△3.7	△9.4	△4.5	△11.3
개별소비세	9.3	10.2	8.9	△0.4	△4.0	△1.2	△12.3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1.1	△0.1	△0.5	△0.1	△0.8
관세	10.3	10.7	7.1	△3.2	△30.9	△3.6	△33.5
기타[1]	8.4	7.9	8.3	△0.1	△0.9	0.4	5.3

주: 1) 기타에는 교육세 및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3년 개별소비세는 8.9조원으로 2022년(9.3조원) 대비 0.4조원(△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본예산(10.2조원)을 1.2조원(△12.3%)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전망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과세대상 품목의 연간 소비량 전망 및 세율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ixsepark@assembly.go.kr, 6788-4668)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김문경 추계세제분석관(mkkim3058@assembly.go.kr, 6788-4836) 관세

31) 이하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및 주세의 세수를 포함한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9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4조원(△7.0%) 감소하였다. 2023년 연간 개별소비세 또한 전년 대비 0.4조원(△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분 세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담배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유류분 및 유연탄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신차 등록대수 감소세 및 국내제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18% 경감제도(2023.7.시행)[32]가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나, 2018년 7월부터 5년간 시행되었던 세율인하(5 → 3.5%) 조치의 종료(2023.6.)가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분의 경우 궐련형 담배 판매는 최근 감소세이나 전자담배 판매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개별소비세 유류분 및 유연탄분 세수는 정부의 세율인하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연료인 부탄가스(LPG Butane)의 경우,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세율인하 조치가 2022년중 확대되어[33] 2023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 전년 대비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발전용 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연료의 경우 급격한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2022년 8월부터 인하(△15%)된 세율이 적용[34]되었으나, 2023년은 연중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것에 기인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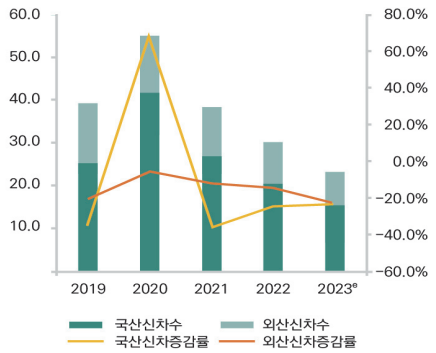
32)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국내 제조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인 반면, 수입품의 경우는 보세구역 반출가격(수입신고가격)인 관계로, 유통관련 판관비 및 이윤이 국내품의 과세표준에만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품이 수입품보다 세부담이 과도한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33) 개별소비세율(LPG, 원/kg): ('21.11.~'22.4.) 220, ('22.5~7.) 193, ('22.8.~'23.10.) 176.4

34) 개별소비세율(유연탄, 원/kg): 저발열 발전용유연탄 43 → 36.5, 중발열 발전용유연탄 46 → 39.1, 고발열 발전용유연탄 49 → 41.6,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 12 → 10.2

[그림 23] 신차 등록대수: 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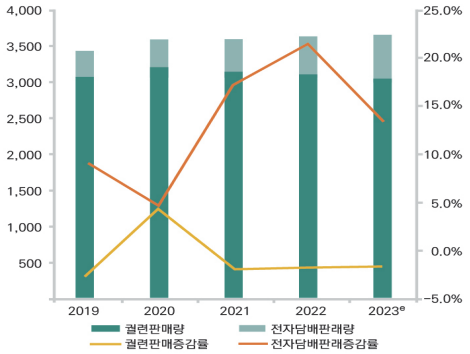
(단위: 만대, %)



주: 1. 배기량 1,000cc 이상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신규 등록대수
2.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4] 담배판매량: 2019~2023년

(단위: 백만갑, %)



주: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2023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수입은 11.1조원으로 2022년(11.1조원) 대비 567억원(△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본예산(11.1조원)을 874억원(△0.8%)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7.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7.7조원 대비 0.5조원(6.5%) 감소하였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탄력세율 인하 정책에 기인한다.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2021년 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2022년중 확대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고 있다(휘발유 △25%, 경유 △37%).[35] 이에 따라 2023년 1~7월 평균 세율이 전년동기보다 낮은 수준[36]이기 때문에 8월 누적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는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이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등[37]을 반영하여 세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35) 인하폭은 2021년 11월 적용 세율(휘발유 529원/L 및 경유 375원/L) 기준이다.
36) 평균세율(원/L): ('22.1~7.) 휘발유 400.3, 경유 284.1 → ('23.1~7.) 휘발유 396.7, 경유 238.0
37) 휘발유 2.0%, 경유 1.1%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표 15]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유류분 세율 변화

기간	적용 세율(인하폭)		
	휘발유분	경유분	부탄가스분
2021년 11월 ~ 2022년 4월	423.0원/L	300.0원/L	220.0원/kg
	(△20%)		
2022년 5월 ~ 6월	370.0원/L	263.0원/L	193.0원/kg
	(△30%)		
2022년 7월 ~ 12월	332.5원/L	238.0원/L	176.4원/kg
	(△37%)		
2023년 1월 ~ 현재	396.7원/L	238.0원/L	176.4원/kg
	(△25%)	(△37%)	

주: 당초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부탄가스 275원/kg 수준
자료: 관련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관세

2023년 관세는 7.1조원으로, 2022년(10.3조원) 대비 3.2조원(△3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3년 본예산(10.7조원)을 3.6조원(△33.5%)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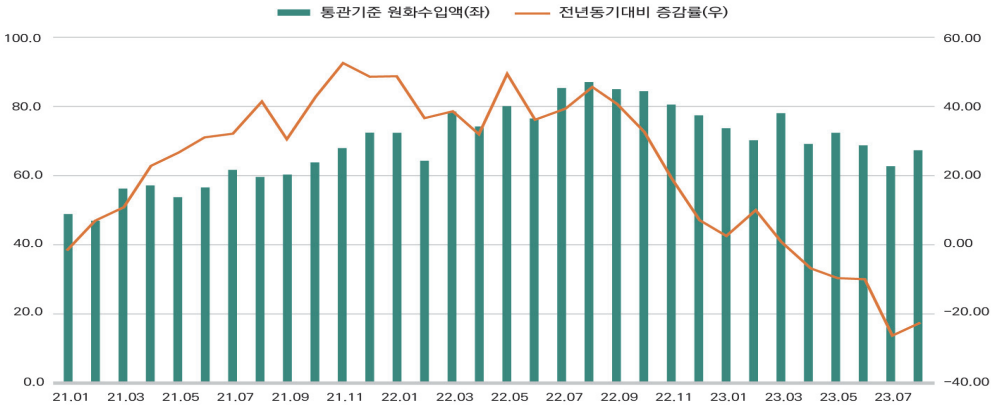
2023년 연간 관세 전망은 8월까지의 징수실적에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관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4.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7.4조원) 대비 2.8조원(△38.4%)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세의 감소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 ①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의 감소와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액의 증가이다.

먼저 2023년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을 보면, 2023년 8월까지의 누적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은 561.6조원으로 전년동기(618.0조원) 대비 56.4조원(9.1%) 감소하였다.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은 2023년 1~3월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7월(62.6조원)에는 전년동월(85.3조원) 대비 26.6%(22.7조원) 감소하는 등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5]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금액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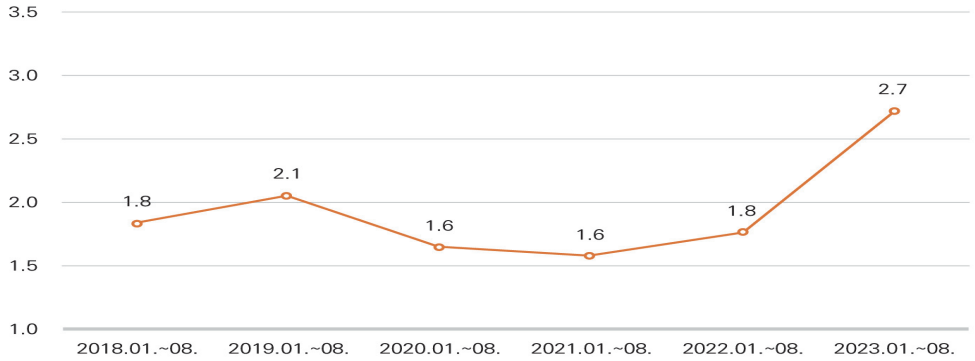
주: 통관기준 원화수입액은 월별 통관기준 수입액(달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월별 원/달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2023년 8월 누적 관세수입의 감소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0.9조원(54.2%)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징수하지만, 해당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는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시차가 길지 않으나, 2023년의 경우 작년 고유가 시기에 수입된 원유를 정제한 정유사 등이 금년에 이를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액이 예년 수준을 벗어난 증가세를 보였다고 관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그림 26] 연도별 8월 누적 관세환급액 추이: 2018~2023년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기타 자산세수[38]는 37.2조원으로, 전년(42.8조원) 대비 5.7조원(△1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예산(40.4조원)을 3.2조원(△8.0%)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9조원(△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평가액 감소와 증여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0.9조원(△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과세표준인 증권거래대금은 증가하였지만,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0.5조원(△7.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6] 2023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2 실적 (A)	2023					
		본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42.8	40.4	37.2	△5.7	△13.2	△3.2	△8.0
상속세 및 증여세	14.6	17.1	13.7	△0.9	△5.9	△3.4	△19.9
증권거래세	6.3	5.0	5.8	△0.5	△7.4	0.9	17.4
종합부동산세	6.8	5.7	4.9	△1.9	△27.6	△0.8	△13.8
기타[1)]	15.1	12.6	12.7	△2.4	△16.1	0.1	0.7

주: 1) 기타에는 인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choi1009@assembly.go.kr, 6788-4838)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eunbi15@assembly.go.kr, 6788-4839) 종합부동산세

38) 이하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3.7조원으로, 2022년(14.6조원) 대비 0.9조원(△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본예산 17.1조원을 3.4조원(△19.9%) 하회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9%)가 예상되지만, 증여세는 전년 대비 1.0조원(△14.5%) 감소한 5.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전망은 8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과 최근의 증여거래 건수 추이, 자산평가액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8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10.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9조원(△8.1%)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증여거래 건수 감소에 기인한 증여세수의 감소(△1.0조원, △19.0%)에 기인한다. 부동산 증여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금년 4월 전년동기 대비 53.9%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30%를 상회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17] 2023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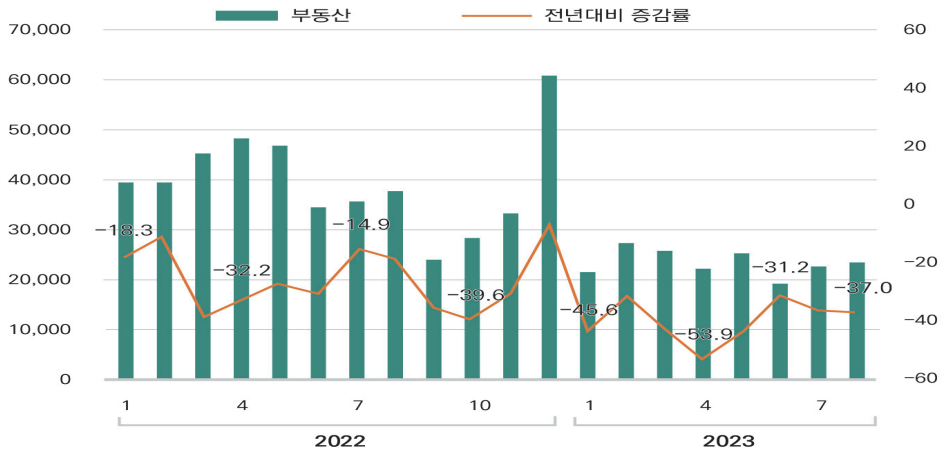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2.1~8.(A)	2023.1~8.(B)	차이(B-A)	
			증감액	증감율
계	11.1	10.2	△0.9	△8.1
상속세	5.8	5.9	0.1	1.9
증여세	5.3	4.3	△1.0	△1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7]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22.1. ~ 2023.8.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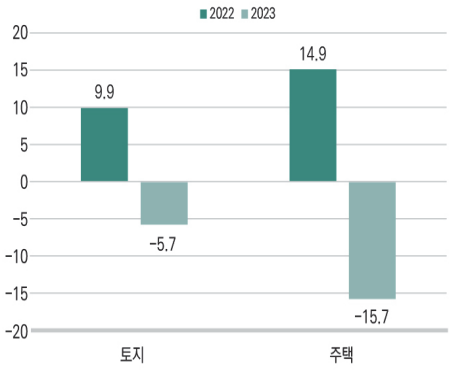
주: 부동산 증여건수는 토지 증여거래 필지수와 건축물 증여거래 동(호)의 합계로 산출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평가액도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증여세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증감률의 경우 주택은 전년 대비 △15.7%, 토지는 △5.7%를 기록하였다.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역시 2023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3.3% 하락하였다.

[그림 28] 공시가격 상승률 및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단위: %)

[공시가격 상승률]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주: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의 기준시점은 2020년 6월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및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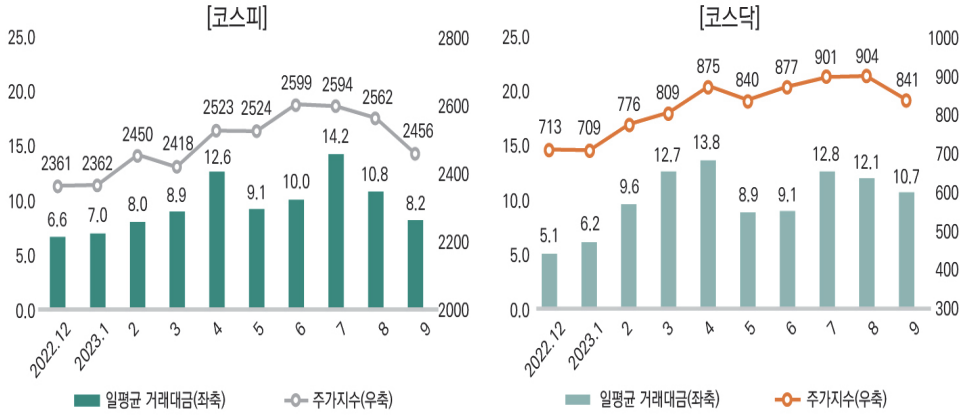
2023년 증권거래세는 5.8조원으로, 2022년(6.3조원) 대비 0.5조원(△7.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5.0조원)을 0.9조원(17.4%)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8월 누적 기준 4.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5조원(△10.1%) 감소하였다. 2023년 1~8월간 증권거래대금은 코스피 1,817조원, 코스닥 1,88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 26.6%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증권거래세가 감소한 것은 증권거래세율이 0.03%p 인하[39]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3년 증권거래세 전망은 최근의 주가 및 거래대금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코스피의 경우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이 7월 14.2조원에서 9월 8.2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코스닥도 일평균 거래대금도 7월 12.8조원에서 9월 10.7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9] 일평균 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단위: 조원)



주: 9월 거래대금은 일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9)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 → 0.05%, (코스닥) 0.23 → 0.20%

종합부동산세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4.9조원으로, 전년(6.8조원) 대비 1.9조원(△27.6%) 감소하여 본예산(5.7조원) 대비 0.8조원(△13.8%)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근 공시가격 증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7조원에서 2022년 6.8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40] 등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과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표 18] 종합부동산세 징수실적 및 전망 추이: 2019~2023년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전망)
종합부동산세	2.7 (42.6)	3.6 (34.8)	6.1 (70.3)	6.8 (10.9)	4.9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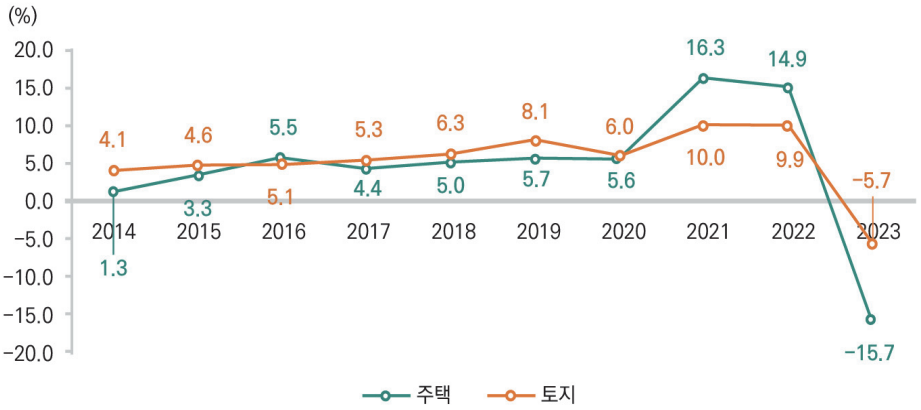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먼저, 공시가격은 전년 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반영해서 평가·산정하게 된다. 2023년 공시가격은 2022년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전 대비 하향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전국 평균 주택[41] △15.7%, 토지 △5.7%)를 시현하였다. 또한 2022년「종합부동산세법」개정으로 주택분 과세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분 세율이 인하된 세수효과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전망하였다.

40) 2022년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발표한 종전 계획(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에서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5%, 토지 65.4%)으로 낮추었다.

41)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을 의미한다.

[그림 30]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2014~2023년



주: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9]「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

구분		2주택 이하[1]		3주택 이상[1]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과세기준액(개인)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일반) 6억원	· 12억원 · 9억원	· 6억원	· 9억원
과표별세율	3억원 이하	0.6%	0.5%	1.2%	0.5%
	3~6억원	0.8%	0.7%	1.6%	0.7%
	6~12억원	1.2%	1.0%	2.2%	1.0%
	12~25억원	1.6%	1.3%	3.6%	2.0%
	25~50억원		1.5%		3.0%
	50~94억원	2.2%	2.0%	5.0%	4.0%
	94억원 초과	3.0%	2.7%	6.0%	5.0%
	법인	3.0%	2.7%	6.0%	5.0%
세부담 상한		150%	(좌동)	300%	150%

주: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1]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는 금년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2023년 국세수입은 341.4조원으로 예상하였고, 본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중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높은 초과세수(본예산 대비 2021년 61.3조원, 2022년 52.6조원)가 발생한 것과는 반대로 2023년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의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기업의 영업실적이 급감한 것과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주요 세목별 전망 결과와 전년 대비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11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5조원(△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소(△14.8조원)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법인세는 79.6조원으로, 전년 대비 24.0조원(△23.1%) 감소하여 국세수입 감소 원인에는 법인세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영업실적(상장사영업이익, 개별기준)이 2021년 119.7조원에서 2022년 81.7조원으로 감소(전년 대비 △31.8%)한 것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는 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9.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관수입액 부진(8월기준 전년 대비 12.1% 감소)과 함께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것의 영향이 컸다.

기타 세목 중에는 통관수입액의 감소 영향으로 관세의 감소(전년 대비 △3.1조원, △29.7%)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2.1조원(△3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22년 실적	'23년 본예산	'23년 재추계	'22년 실적 대비		'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95.9	400.5	341.4	△54.5	△13.8	△59.1	△14.8
[일반회계]	385.2	390.3	331.1	△54.0	△14.0	△59.1	△15.2
◇ 내 국 세	352.3	358.0	303.1	△49.2	△14.0	△54.8	△15.3
ㅇ 소 득 세	128.7	131.9	114.2	△14.5	△11.3	△17.7	△13.4
▪ 종합소득세	23.9	24.7	21.1	△2.8	△11.7	△3.6	△14.5
▪ 양도소득세	32.2	29.7	17.5	△14.8	△45.8	△12.2	△41.2
▪ 근로소득세	57.4	60.6	58.6	1.2	2.0	△2.0	△3.3
ㅇ 법 인 세	103.6	105.0	79.6	△24.0	△23.1	△25.4	△24.2
ㅇ 상속증여세	14.6	17.1	13.8	△0.8	△5.5	△3.3	△19.5
ㅇ 부가가치세	81.6	83.2	73.9	△7.7	△9.5	△9.3	△11.2
ㅇ 개별소비세	9.3	10.2	9.0	△0.3	△3.7	△1.2	△12.0
ㅇ 증권거래세	6.3	5.0	6.5	0.2	2.5	1.5	29.9
ㅇ 인 지 세	0.8	0.8	0.8	△0.0	△3.1	△0.0	△5.1
ㅇ 과년도수입	7.3	4.8	5.4	△1.9	△26.2	0.6	1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2.5	△0.3	△2.8
◇ 관 세	10.3	10.7	7.3	△3.1	△29.7	△3.5	△32.3
◇ 교 육 세	4.6	4.7	5.2	0.6	12.5	0.5	11.1
◇ 종합부동산세	6.8	5.7	4.7	△2.1	△31.4	△1.0	△18.3
[특별회계]	10.8	10.2	10.3	△0.5	△4.6	0.1	0.7
◇ 주 세	3.8	3.2	3.5	△0.3	△7.3	0.3	8.6
◇ 농어촌특별세	7.0	7.0	6.8	△0.2	△3.2	△0.2	△2.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Ⅱ. 2024년 국세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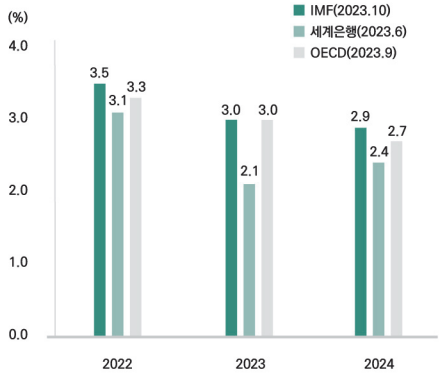
1. 2024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도 금리·환율 상승, 세계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성장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42]과 2024년[43]의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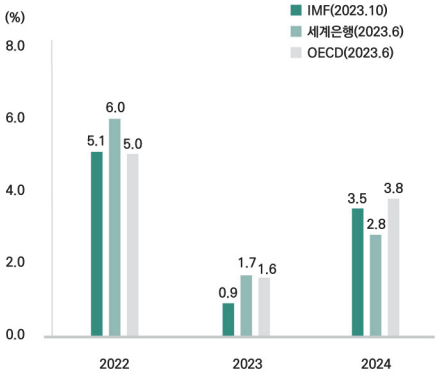
우선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 다만, 2024년에는 국제교역량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IMF,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을 2.4~2.9%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교역량 증가율은 2023년 0.9~1.7%에서 2024년 2.8~3.8%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실질GDP 성장률]



[국제교역량 증감률]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국제교역량 증가율 하락 등에 따라 우리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 및 내수 증가세 약화로 2023년 실질GDP는 2022

42)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징수시차가 존재하므로 2023년 경제지표도 살펴보아야 한다.
4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년 2.6% 대비 낮은 수준인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은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여 2.0%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 증가세 둔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3년 2.4% 대비 0.2%p 낮은 2.2%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 계획 등으로 토목부문 건설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 등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IT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한 기업의 설비 증설에 따라 전년 대비 4.5%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국고채금리(3년)는 물가의 하방 안정세 지속 및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압력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5%p 하락한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금리(3년, AA-)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축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7%p 하락한 3.6%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7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2~2023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취업자 수의 낮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명목임금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상승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나, 실질GDP의 낮은 성장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하락, 저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 3.4%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2.4% 상승할 전망이다. 2024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액은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량이 회복됨에 따라 2023년 대비 각각 7.2%,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격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원유 감산 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경기 하방요인도 존재한다.

[표 20]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21	2022	2023e	2024e
실질GDP 성장률	4.1	2.6	1.1	2.0
민간소비	3.7	4.1	2.4	2.2
건설투자	△1.6	△2.8	1.0	0.2
설비투자	9.0	△0.9	0.6	4.5
경상수지(억달러)	883	298	280	360
통관수출 증가율	25.7	6.1	△9.6	7.2
통관수입 증가율	31.5	18.9	△10.5	5.7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2.5	1.3	1.1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5.1	3.4	2.4
취업자수 증감(만명)	36.9	81.6	32.9	23.7
명목임금 상승률	4.6	4.9	2.9	3.0
국고채금리(3년)	1.4	3.2	3.5	3.0
회사채금리(3년, AA-)	2.1	4.2	4.3	3.6
명목GDP 성장률	6.7	3.9	2.2	4.2

주: 2021~2022년은 실적치, 2023년 및 2024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2024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2024년도 국세수입은 361.4조원으로, 2023년(340.3조원)[44] 대비 21.1조원(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및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2023년의 세수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결과이다. 세목별로는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의 경우 2022년 하반기의 부진한 기업실적 흐름이 2023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세율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총괄

44) 이하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45]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8조원으로, 2023년(114.2조원) 대비 10.7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증가는 주로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사업소득의 완만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75.0조원으로, 2023년(79.1조원) 대비 4.1조원(△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의 감소는 주로 신고분에서 발생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금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다. 다만, 법인 금융자산의 증가세 지속으로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81.1조원으로 2023년(74.4조원) 대비 6.7조원(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2023년까지의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결과이다.

기타 세목은 대부분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증권거래세율 인하(0.02%p)가 예정되어 있어 2023년 대비 0.7조원(△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공시가격의 상승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에 수납될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축소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9조원(△18.4%) 감소한 4.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국세수입 전망(361.4조원)은 정부 예산안(367.4조원)을 6.0조원(△1.6%)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3년 및 2024년의 경제지표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 국세수입을 정부보다 1.1조원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46]

---

45) 2023년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23년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46) 보다 구체적인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는 “Ⅱ.3.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실적은 전망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표 21]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40.3	367.4	361.4	21.1	6.2	△6.0	△1.6
일반회계	330.3	356.2	350.5	20.2	6.1	△5.6	△1.6
내국세	302.3	321.7	316.7	14.4	4.8	△5.0	△1.5
1. 소득세	114.2	125.8	124.8	10.7	9.3	△1.0	△0.8
2. 법인세	79.1	77.7	75.0	△4.1	△5.2	△2.7	△3.5
3. 상속세 및 증여세	13.7	14.7	14.0	0.3	2.2	△0.6	△4.3
4. 부가가치세	74.4	81.4	81.1	6.7	9.1	△0.3	△0.4
5. 개별소비세	8.9	10.2	10.1	1.2	12.9	△0.1	△0.9
6. 증권거래세	5.8	5.4	5.2	△0.7	△11.7	△0.2	△4.2
7. 인 지 세	0.8	0.9	0.9	0.1	11.8	0.01	0.9
8. 과년도수입	5.4	5.7	5.6	0.3	5.3	△0.1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15.3	4.2	38.4	△0.02	△0.2
관 세	7.1	8.9	8.7	1.6	22.1	△0.2	△2.2
교 육 세	4.9	6.2	5.8	0.9	18.1	△0.4	△5.8
종합부동산세	4.9	4.1	4.0	△0.9	△18.4	△0.1	△2.2
특별회계	10.0	11.2	10.8	0.9	8.6	△0.3	△3.1
주 세	3.4	3.6	3.5	0.1	2.6	△0.1	△1.9
농어촌특별세	6.6	7.6	7.3	0.8	11.7	△0.3	△3.7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4년 소득세는 124.8조원으로, 2023년(114.2조원) 대비 10.7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 125.8조원을 1.0조원(△0.8%) 하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임금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주택 가격 및 주택·토지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종합소득세는 명목GDP 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소득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증가세는 소매업체의 국내상품판매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14.2	125.8	124.8	10.7	9.3	△1.0	△0.8
신고분	38.6	45.5	43.6	5.0	12.9	△1.9	△4.1
종합소득세	21.2	23.1	22.5	1.2	5.8	△0.6	△2.6
양도소득세	17.4	22.4	21.1	3.8	21.6	△1.3	△5.7
원천분	75.6	80.3	81.2	5.7	7.5	0.9	1.1
이자소득세	4.5	4.9	5.5	0.9	20.7	0.5	11.1
배당소득세	3.9	3.9	3.8	△0.1	△2.9	△0.1	△3.5
사업소득세	4.4	4.7	4.7	0.3	7.7	△0.1	△1.1
근로소득세	58.6	62.1	62.7	4.1	6.9	0.6	1.0
연금소득세	0.5	0.6	0.6	0.1	21.6	0.0	△7.5
기타소득세	2.5	2.7	2.8	0.3	11.7	0.1	3.0
퇴직소득세	1.2	1.4	1.2	0.1	4.8	△0.1	△10.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근로소득세, 소득세 기타
문석휘 추계세제분석관(slugnoid@assembly.go.kr, 6788-4669)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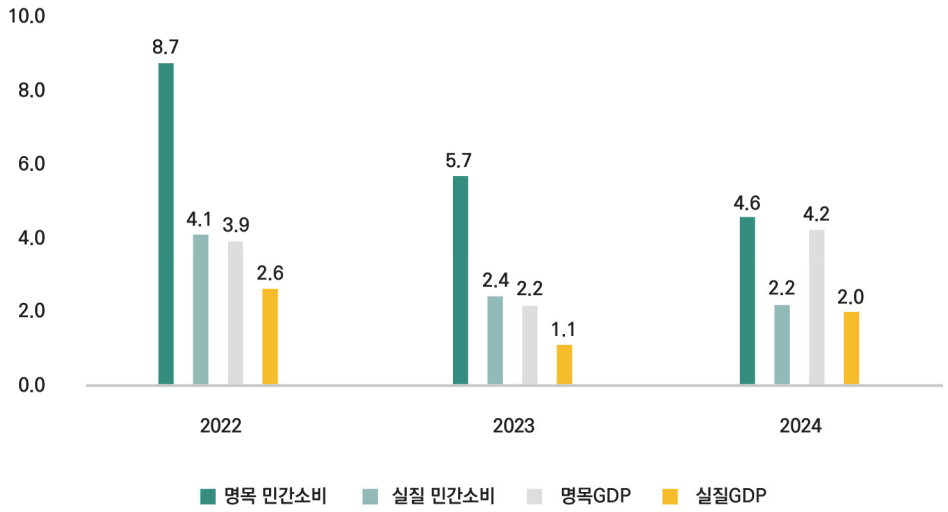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2024년 종합소득세는 22.5조원으로, 2023년(21.2조원) 대비 1.2조원(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3.1조원)을 0.6조원(△2.6%)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종합소득세수는 전년의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이연세수 기저효과[47]가 해소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종합소득세의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2023.10[48])를 살펴보면,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은 5.7%,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4%, 명목GDP 성장률은 2.2%, 실질GDP 성장률은 1.1%로 나타난다. 이에 2024년 종합소득세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림 32]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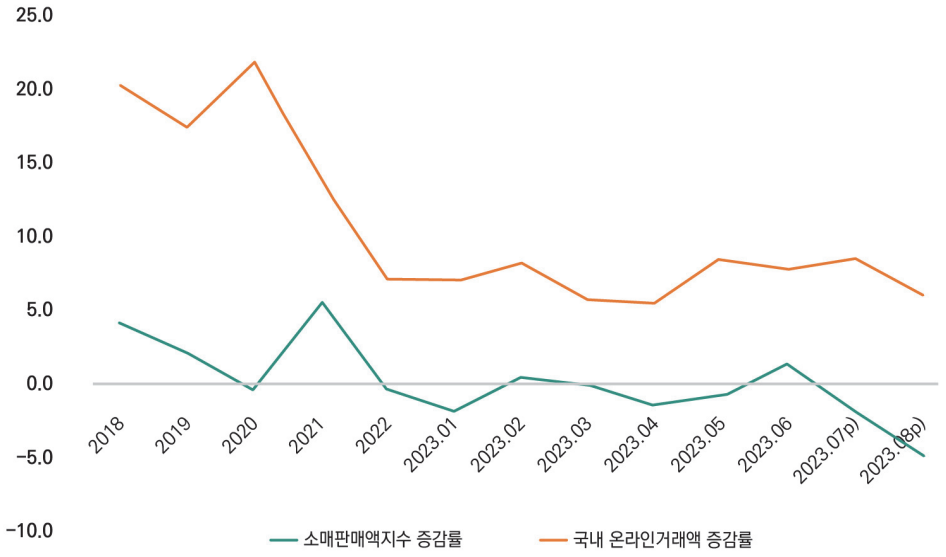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세수 증가세는 2023년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 판매액 증가율 둔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등에 따라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비스가 제외된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판매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최근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 소매판매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7%로

47)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액 2.7조원의 납기가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로 연장되었다.
4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나타났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49]하다 7월 이후에는 소매판매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추가로 국내 온라인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2021~2022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에는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1~2022년 동안 각각 20.2%, 10.3% 증가하였으나, 2023년 1월에는 7.0%, 8월 6.1%로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그림 33] 소매판매액지수와 국내 온라인거래액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주: 소매업체 국내 상품판매액 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 또한 2024년 종합소득세의 증가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될 경우 약 0.4조원의 종합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49) 2023년 6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5%로 나타났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비한 수입차 구매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승용차 부문을 제외할 경우에는 △0.9%로 하락한다.

양도소득세

2024년 양도소득세는 21.1조원으로 2023년 전망 대비 3.8조원(21.6%) 증가하고 정부 예산안 22.4조원 대비 1.3조원(△5.7%)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양도소득세 전망에 있어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의 거래량 감소 및 가격 하락 추세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소 완화되고 있어, 2024년부터 거래량 및 가격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아 2024년 양도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최근 누적 거래량 추이, 관련 연구기관의 부동산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4년의 거래량이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부동산 누적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2023년 1월 2.9만호(전년 대비 △33.9%)에서 8월 41.1만호(0.9%), 토지는 2023년 1월 8.9만필지(△48.8%)에서 8월 102.2만 필지(△23.2%)로 거래량 감소폭이 감소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은 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으로 인한 실수요 거래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2024년 주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향후 금리 향방의 불확실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50], 주택 공급물량[51] 및 신규착공 감소 등의 요인으로 거래량 증가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은 관련 연구기관의 부동산 시장 전망, 월별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고려하여 2023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순환국면 진단에 따르면, 2021년 4분기를 고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이 둔화국면에 진입한 상태이며 당분간 이 수준이 지속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약해졌고 향후 주택을 중심으로 자산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52]

한국은행 또한 최근 실거래가 상승세와 매매수급지수의 개선흐름 등을 근거로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53]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월별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54]는 2022년 11월 61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월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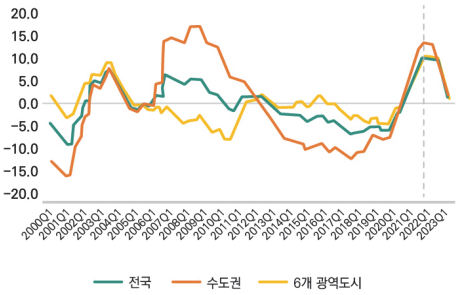
---

50) 2023년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3.82%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6%p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올해 중 가장 큰 수준이다.
51) 2023년 1~9월 아파트 누적 분양물량은 약 12.6만호(전년동기 대비 △47%)를 기록했다.
52)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2023.8.11.
5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8.
54)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조사 중 하나로 해당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장기평균과 비교했을 때 조사시점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한국은

80, 8월 110으로 소비자는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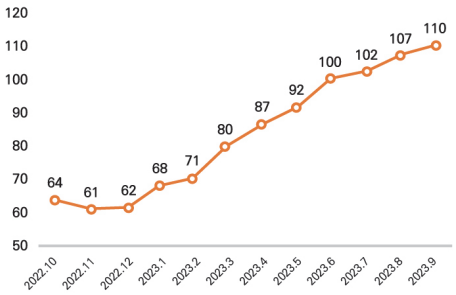
다만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이 예상되고 대출규제 정책이 유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시장 회복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전망에 반영하였다.

[그림 34] 명목GDP를 이용한 주택시장 순환국면 진단



주: 주택시장 순환국면은 KB 매매가격지수와 한국은행 명목GDP간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도출, 2023년 2분기 기준
자료: 국토연구원(2023)

[그림 35] 월별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



주: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2003~2022년의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23.9.

근로소득세

2024년 근로소득세는 62.7조원으로, 2023년(58.6조원) 대비 4.1조원(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 62.1조원을 0.6조원(1.0%)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 근로소득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인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을 비롯하여 실효세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였다. 전망의 전제인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6%, 2024년에는 1.4% 증가할 것으로[55], 임금상승률은 2023년 2.9%, 2024년 3.0%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3년 정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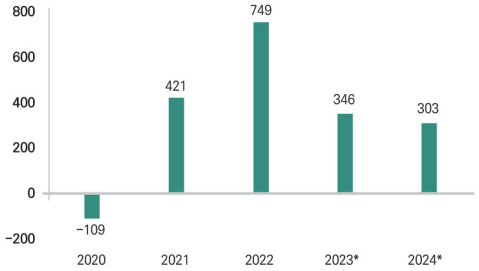
행, 소비자동향조사, 2023.9.)

55)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전망(%): ('22년) 3.6 → ('23년^{e}) 1.6 → ('24년^{e}) 1.4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22년) 4.9 → ('23년^{e}) 2.9 → ('24년^{e}) 3.0
근로소득세 증가율 전망(%): ('22년) 21.6 → ('23년^{e}) 2.1 → ('24년^{e})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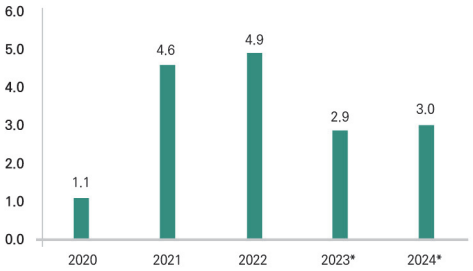
법개정안 및 2024년까지 이어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효과 등은 2024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근로소득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은 자녀장려세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며, 2024년 0.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전망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명)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주: 2023년과 2024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경제 전망」

소득세 기타

이자소득세는 2024년 5.5조원으로, 2023년(4.5조원) 대비 0.9조원(2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진 금리의 상승과 고금리 수준이 이어짐에 따른 개인예금·채권 잔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배당소득세는 2024년 3.8조원으로, 2023년(3.9조원) 대비 0.1조원(△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법인 배당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배당액이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사업소득세는 2024년 4.7조원으로, 명목민간소비의 증가 및 사업소득세의 최근 추세에 따라 2023년(4.4조원) 대비 0.3조원(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소득세는 2024년 2.8조원으로, 2023년(2.5조원) 대비 0.3조원(11.7%)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0~2022년 기타소득세의 민간소비 탄력성(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대비 기타소득세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연금소득세는 2024년 0.6조원으로, 2023년(0.5조원) 대비 0.1조원(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연금소득세는 6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2019년 이후 연금소득세 증가율 둔화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는 2024년 1.2조원으로, 2023년(1.2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퇴직소득세는 최근 연령별 인구증가율 및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 법인세

2024년 법인세는 75.0조원으로, 2023년(79.1조원) 대비 4.1조원(△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77.7조원)을 2.7조원(△3.5%)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5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6조원(△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안(56.8조원)을 3.2조원(△5.6%)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7.3%) 증가함에 따라 예산안(20.8조원)을 0.5조원(2.3%)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3] 2024년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79.1	77.7	75.0	△4.1	△5.2	△2.7	△3.5
− 신고분	59.2	56.8	53.6	△5.6	△9.4	△3.2	△5.6
− 원천분	19.9	20.8	21.3	1.4	7.3	0.5	2.3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법인세 신고분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837) 법인세 원천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상반기까지의 법인 영업이익 등 실적과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 등을 바탕으로 2024년 법인세 신고분을 전망하였다. 2024년 법인세 신고분의 기반이 되는 2023년 법인실적은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법인실적의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상반기 법인실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2.4%, 56.5% 감소했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2.3%로 둔화되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과 세전순이익률은 각각 3.8%, 2.7%로 나타나 2021년과 2022년 대비 감소하였다.[56]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2023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액 증감률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0.4%, △4.3%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도 둔화되었다.

[표 24] 기업 경영 실적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상장법인(한국거래소)[1]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1	2022	2023 상반기	2021	2022[2]	2023[3]	
						Q1	Q2
매출액증감률	19.8	21.3	2.3	16.9	17.0	0.4	△4.3
영업이익증감률	73.6	△14.7	△52.4	53.8	△9.2	-	
세전순이익증감률	121.6	△25.4	△56.5	95.2	△20.1	-	
영업이익률	8.0	5.7	3.8	5.6	5.3	2.8	3.6
세전순이익률	8.3	4.7	2.7	6.5	5.2	5.0	5.9

주: 1)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2023 상반기 실적은 615개사)
2) 전체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정치(10월) 발표 전 외부감사대상 법인(30,129개)의 속보치
3) 기업경영분석 분기 실적은 외부감사대상 법인 모집단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결산실적',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세부통계(ECO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6) 해당 실적에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23년 1~2분기 당기순이익 △6.8조원)를 포함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법인세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상장사의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1.1%, 54.0%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반기의 부진한 법인실적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2023년 영업이익 컨센서스(연결 기준)[57]는 15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86.4%), 철강·금속(△8.0%), 화학(△17.4%)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58]

[표 25] 업종별 2023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

(단위: 조원, %)

섹터	2023년 영업이익(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코스피 전체	159.4	△14.8
운수장비	32.5	79.3
기계	3.3	40.1
증권	3.8	32.3
유통업	9.6	7.9
철강·금속	7.8	△8.0
건설업	2.9	△12.7
화학	16.3	△17.4
운수창고	7.0	△57.8
전기·전자	8.2	△86.4
전기가스업	-5.6	적자지속

자료: FnGuide(조회일: 2023.10.12.)

이와 같은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내 법인의 실적 부진은 2023년 통관수출액의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통관수출액은 8월 누적 4,09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하였는데, 1~8월 중 전년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교역조건 또한 상반기 중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6월 이후 소폭 개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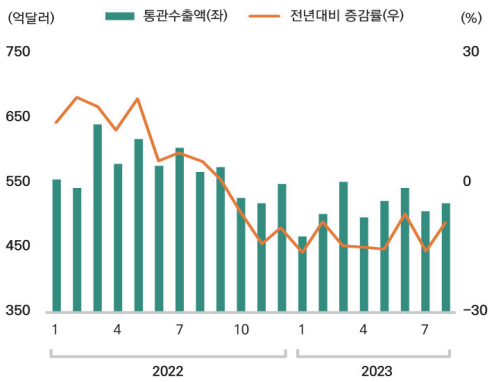
57) 증권사의 컨센서스란 유가증권 상장사 269개 상장사의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에서 전망한 2023년 영업이익 전망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58) 반면, 운수장비(79.3%), 기계(40.1%), 증권업(32.3%) 등 업종에서는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전기가스업은 전년에 이어 영업이익 적자(5.6조원 수준)가 예상된다.

었는데, 이는 수출가격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높았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인해 수입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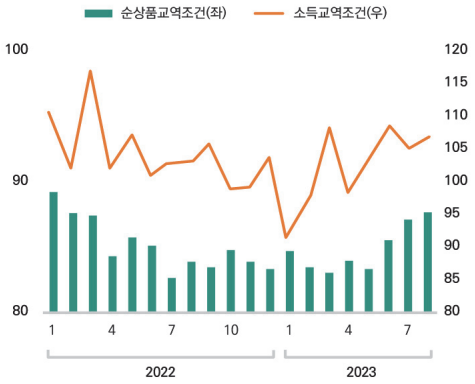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교역조건의 개선의 흐름은 하반기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2023년 하반기 현재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원화 환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재료원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림 37] 통관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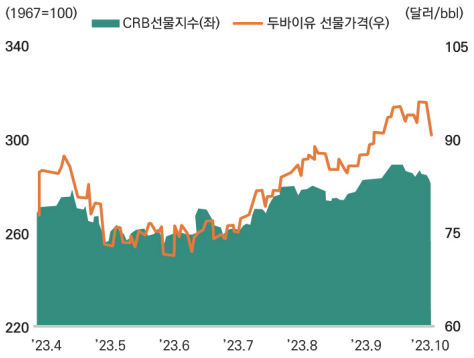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or.kr)

[그림 38] 교역조건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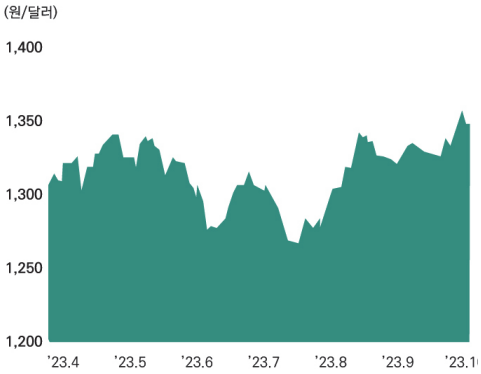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그림 39] CRB 선물지수 및 원유 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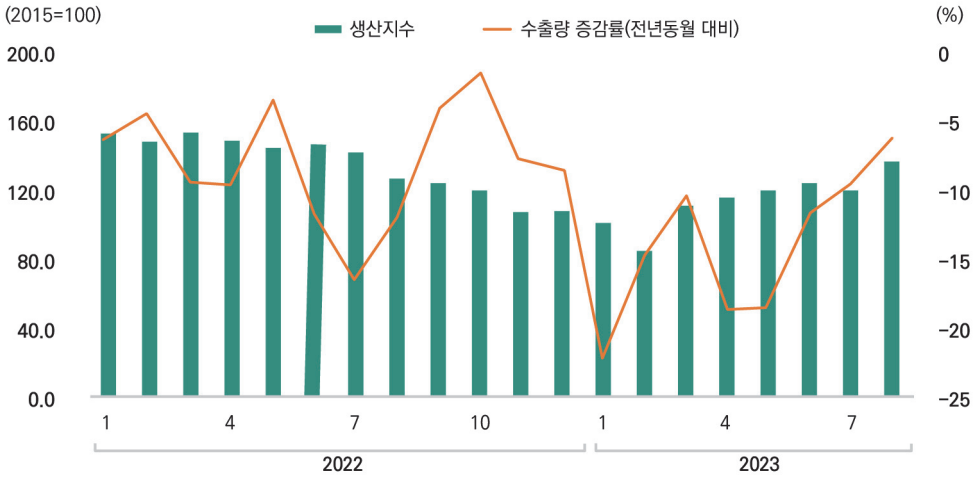
[그림 40]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CRB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다만, 최근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인실적이 반등할 여지도 존재한다. 반도체 생산지수의 전년 대비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2023년 반도체 수출물량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1월 △22.5%에서 8월 △5.9%까지 감소폭이 개선되었다.

[그림 41] 반도체 생산지수 및 반도체 수출량 증감률



자료: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종합하면 통관수출 등 경제지표가 아직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높은 변동가능성은 법인실적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2024년 법인세 원천분의 경우 2024년 금리 수준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법인 금융자산의 추이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4조원(7.3%) 증가한 21.3조원으로 전망하였다.

(3) 부가가치세

2024년 부가가치세는 81.1조원으로 2023년(74.4조원) 대비 6.7조원(9.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예산안(81.4조원)을 0.3조원(△0.4%) 하회하는 수준이다.

[표 26] 2024년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74.4	81.4	81.1	6.7	9.1	△0.3	△0.4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의 증가세, 지방소비세율 인상 종료 및 2023년의 세수감소(△8.9%)에 대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2023.10.)을 살펴보면, 2024년 명목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4.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 민간소비를 구성하는 실질 민간소비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2.2%)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상승 추세(2.4%)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 여건을 거치며 높아진 가계 저축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59]하는 점 등은 부가가치세원으로서의 민간소비 여력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명목 민간소비는 2023년의 높은 상승률(5.7%)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추세적 관점에서 과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의 경우 2023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하며 부가가치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23.10.)는 반도체 등 IT품목 등의 상품수출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속에서 통관수입이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통관수입 증가세가 수출·설비투자 개선도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수입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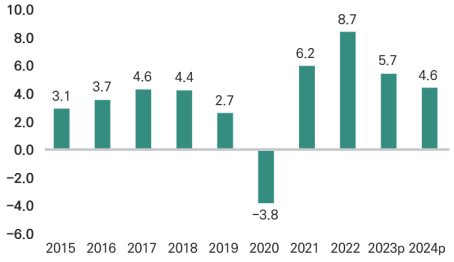
59) 가계 순저축률 추이(%): ('18년) 6.1 ('19년) 6.9 ('20년) 12.4 ('21년) 10.6 ('22년) 9.1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격이 2023년 6월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물가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도 축소되는 등 수입액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24년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이에 따른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의 추가적인 감소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방소비세율은 2020년 21.0%, 2022년 23.7%, 2023년 25.3%로 인상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점에 국세 부가가치세의 전년 대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부터는 전년과 동일한 지방소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를 야기하는 제도적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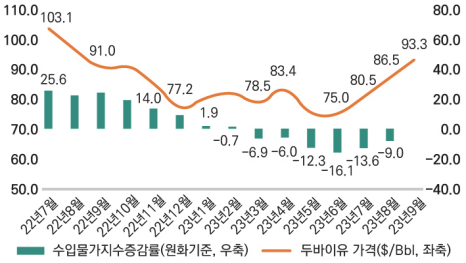
(단위: %)



주: '23~'24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및 국회예산정책처(2023.10.)

[그림 43] 수입물가지수 및 원유가격 추이

(단위: %, $/Bbl)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4) 기타 소비세수

2024년 기타 소비세수는 43.4조원으로 2022년 35.5조원 대비 8.0조원(2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4.2조원)을 0.7조원(△1.7%)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및 유류소비 증가 등으로 2023년(11.1조원) 대비 4.2조원(3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별소비세도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와 발전용 연료 및 자동차에 대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ixsepark@assembly.go.kr, 6788-4668)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김문경 추계세제분석관(mkkim3058@assembly.go.kr, 6788-4836) 관세

한 세율인하분 환원 등으로 2023년(8.9조원) 대비 1.2조원(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통관기준 수입액 증가 및 전년도에 증가하였던 관세환급액이 전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을 가정하여 2023년(7.1조원) 대비 1.6조원(2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7] 2024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5.5	44.2	43.4	8.0	22.4	△0.7	△1.7
개별소비세	8.9	10.2	10.1	1.2	12.9	△0.1	△0.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15.3	4.2	38.4	△0.02	△0.2
관세	7.1	8.9	8.7	1.6	22.1	△0.2	△2.2
기타[1)]	8.3	9.7	9.3	1.0	11.7	△0.4	△4.4

주: 1) 기타에는 교육세 및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4년 개별소비세는 10.1조원으로, 2023년(8.9조원) 대비 1.2조원(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0.2조원)을 0.1조원(△0.9%)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에는 수송·발전용 연료 세율환원 등 제도변화가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경우, 2023년은 인하된 세율이 연중 적용[60]되었으나, 2024년에는 환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61] 전망하였다. 자동차분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세율인하 조치 종료로 2024년에는 환원된 세율(3.5 → 5%)이 연중 적용될 것을 가정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6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및 제5호
61) 개별소비세율(유연탄 등, 원/kg): 저발열 발전용유연탄 36.5 → 43, 중발열 발전용유연탄 39.1 → 46 고발열 발전용유연탄 41.6 → 49,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 10.2 → 12

한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경우 궐련형 담배 판매는 최근 감소세이나 전자담배 판매는 높은 증가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를 전망하였다.

[표 28] 개별소비세 에너지 주요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단위: 백만배럴, 백만톤(유연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등유	18.0	17.9	17.7	16.9	16.1	16.1
중유	14.7	11.7	10.0	9.3	8.9	9.2
액화석유가스	114.2	112.4	113.6	123.2	115.1	117.9
유연탄(발전용)	83.6	69.8	68.0	66.2	62.5	60.0

주: 202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3조원으로, 2023년(11.1조원) 대비 4.2조원(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5.3조원)을 0.02조원(△0.2%)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과세대상인 유류 소비량 추이 및 탄력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전망하였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 대미 달러화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2024년에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단계적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전제[62]하여 전망하였다.

[표 29]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단위: 백만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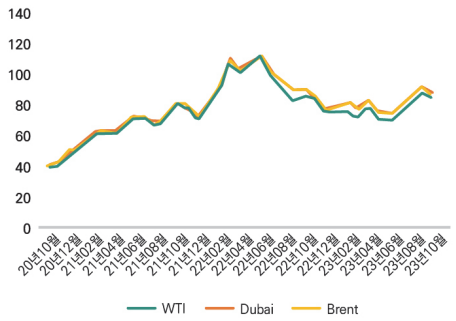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휘발유	82.8	81.0	84.9	88.4	90.1	90.8
경유	164.8	155.5	156.9	152.8	154.2	154.8

주: 202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62)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2023년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유류세 탄력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23.10.20.).

[그림 44] 국제원유가격 동향: 2020.10.~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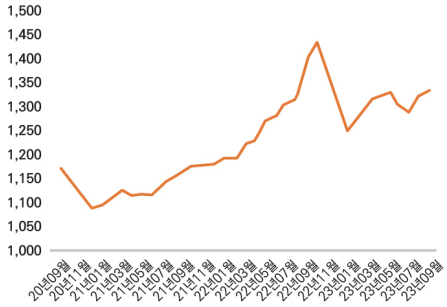
(단위: $/Bbl)



주: 서부텍사스유(WTI) 및 브렌트유는 선물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그림 45] 원/달러 환율추이: 2020.9.~2023.9.

(단위: 원/달러)



주: 서울외국환시장 월평균환율 종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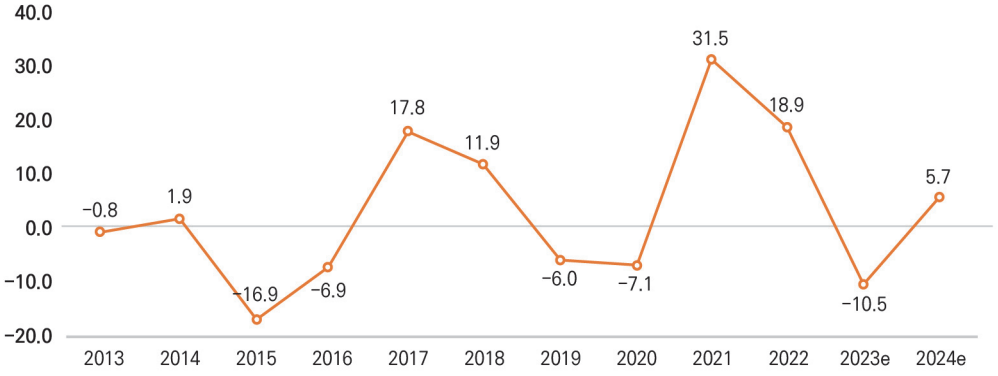
관세

2024년 관세는 8.7조원으로, 2023년(7.1조원) 대비 1.6조원(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8.9조원)을 0.2조원(△2.2%)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의 높은 관세 세수 증가율(22.1%)은 2023년의 특이 요인이었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통관기준 수입액이 수출증가에 따른 원자재·중간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3년 대비 5.7%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림 46]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2013~2024년

(단위: %)



주: 2023~2024년 통관수입 증감률은 NABO 전망에 따른 증감률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4년 기타 자산세수는 37.0조원으로 2023년(37.2조원) 대비 0.1조원(△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38.3조원)을 1.3조원(△3.3%) 하회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증권거래대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7조원(△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일 것을 전제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3년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분납분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보다는 0.9조원(△1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자산가격의 상승률이 미미한 가운데, 증여거래 건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3년 대비 0.3조원(2.2%) 증가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0] 2024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3 NABO 전망(A)	2024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37.2	38.3	37.0	△0.1	△0.4	△1.3	△3.3
상속세 및 증여세	13.7	14.7	14.0	0.3	2.2	△0.6	△4.3
증권거래세	5.8	5.4	5.2	△0.7	△11.7	△0.2	△4.2
종합부동산세	4.9	4.1	4.0	△0.9	△18.4	△0.1	△2.2
기타[1)]	12.7	14.2	13.8	1.1	9.0	△0.3	△2.4

주: 1) 기타에는 인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choi1009@assembly.go.kr, 6788-4838)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eunbi15@assembly.go.kr, 6788-4839)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4.0조원으로, 2023년(13.7조원) 대비 0.3조원(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14.7조원)을 0.6조원(△4.3%) 하회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8.0조원으로 2023년 대비 0.3조원(4.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도 2023년과 유사한 5.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2024년 상속세의 경우 2023년 전망치를 최근의 상속자산유형별 가액 비중[63]으로 안분한 후 자산유형별 가격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자산유형별 가격상승률은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금리 및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추이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고, 유가증권의 경우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가증권(지분증권 · 채권 등)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31]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상속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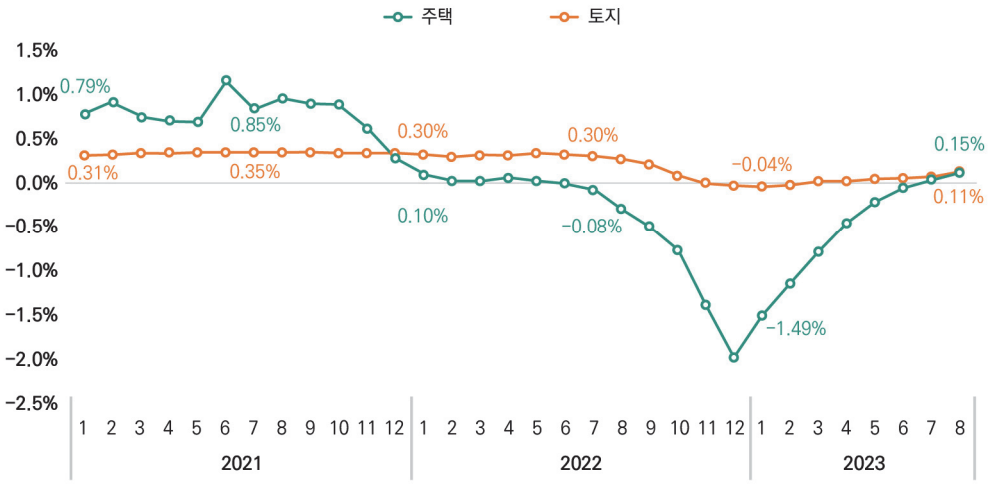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토지	50,738 (34.0)	49,694 (30.3)	60,506 (28.4)	64,383 (24.3)	78,769 (12.6)	60,818 (26.2)
건물	46,808 (31.3)	53,221 (32.5)	69,566 (32.6)	116,484 (44.0)	153,266 (24.5)	87,869 (37.9)
유가증권	17,034 (11.4)	22,920 (14.0)	36,816 (17.3)	28,616 (10.8)	284,616 (45.5)	26,347 (11.4)
금융자산	25,976 (17.4)	26,953 (16.5)	31,491 (14.8)	38,081 (14.4)	55,341 (8.8)	35,568 (15.4)
기타자산	8,838 (5.9)	10,955 (6.7)	15,016 (7.0)	16,908 (6.4)	53,757 (8.6)	21,095 (9.1)

주: 유가증권의 5년 평균은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3) 상속재산가액의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평균 구성비는 건물, 토지, 금융자산, 유가증권, 기타자산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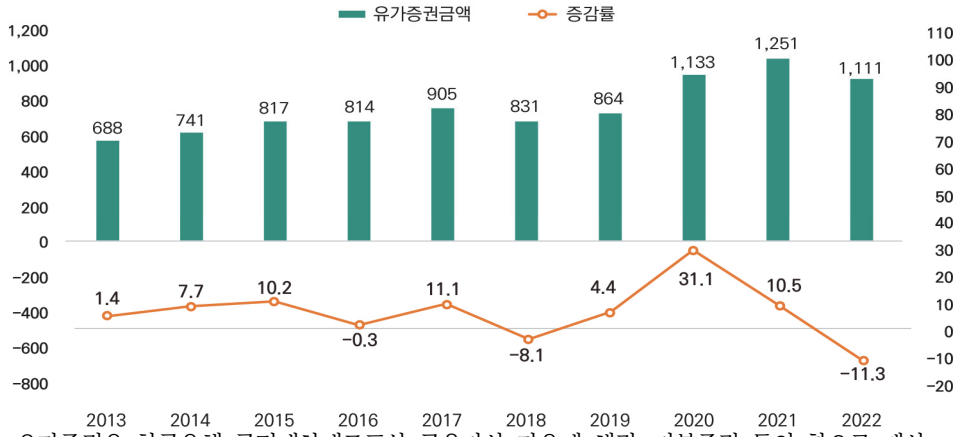
[그림 47]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변동률 추이: 2021.1. ~ 2023.8.



자료: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8] 유가증권 증감률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



주: 유가증권은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 금융자산 가운데 채권, 지분증권 등의 합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전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2023년 증여세 전망치를 최근의 증여자산유형별 가액 비중[64]으로 구분한 후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2022년 이후 부동산 증여거래 건수의 감소세가 지

64) 증여재산가액의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평균 구성비는 건물, 토지, 금융자산, 유가증권, 기타자산 순이다.

속되고 있으며, 금년 4월 이후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2024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증여거래 건수 감소세는 자산가격(코스피지수, 공시지가변동) 및 증여결정건수 추이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표 32]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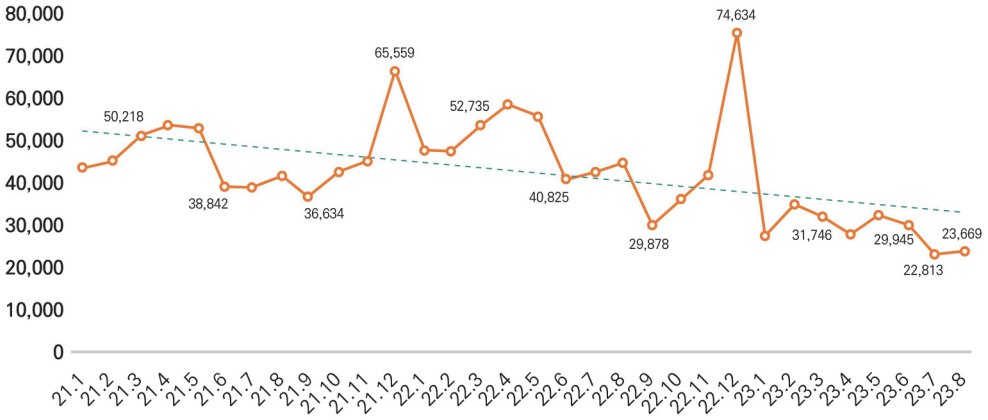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토지	84,982 (29.7)	89,731 (30.5)	74,561 (23.7)	81,673 (15.2)	80,402 (18.2)	82,270 (23.7)
건물	77,725 (27.2)	80,167 (27.3)	98,729 (31.4)	242,204 (45.0)	150,049 (34.0)	101,667 (29.3)
유가증권	42,023 (14.7)	45,275 (15.4)	48,371 (15.4)	68,963 (12.8)	70,496 (16.0)	55,026 (15.9)
금융자산	65,734 (23.0)	63,733 (21.7)	72,822 (23.2)	112,959 (21.0)	113,099 (25.6)	85,669 (24.7)
기타자산	15,637 (5.5)	15,007 (5.1)	19,671 (6.3)	32,300 (6.0)	26,901 (6.1)	21,903 (6.3)

주: 건물의 5년 평균은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49] 부동산 유형별 증여거래 추이: 2021.1. ~ 2023.8.

(단위: 건)



주: 부동산 증여거래 건수는 토지 증여거래(필지수)와 건축물 증여거래(동(호))의 합으로 계산
자료: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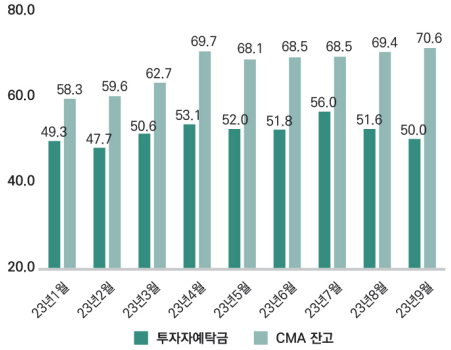
2024년 증권거래세는 5.2조원으로, 2023년(5.8조원) 대비 0.7조원(△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5.4조원)을 0.2조원(△4.2%)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의 증권거래세 감소는 경기 개선 및 금리 하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대금은 증가하나, 증권거래세율이 전년 대비 0.02%p 인하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기인한다. 증권거래대금은 명목GDP 성장률이 4.2%로 전년(2.2%)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CMA 등 증시주변의 대기 자금이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는 점도 투자 수요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증권거래세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년에 증권거래세율이 0.03%p 인하된 후 2024년에는 코스피 세율이 0.05%에서 0.03%로, 코스닥 세율이 0.20%에서 0.18%로 0.02%p 인하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2024년 전년 대비 0.7조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50] 주요 증시주변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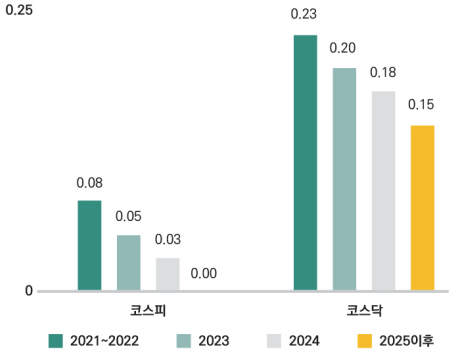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1]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부동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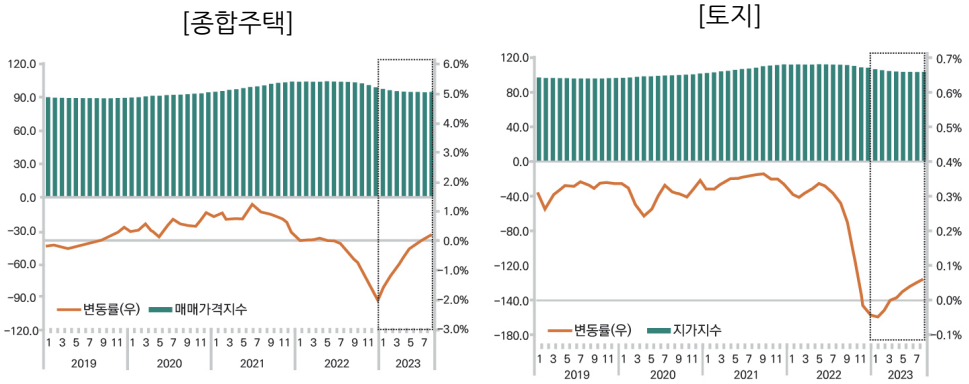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4.0조원으로, 2023년(4.9조원) 대비 0.9조원(△1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4.1조원)을 0.1조원(△2.2%)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수는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전망한 뒤, 종합부동산세 분납분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평가·산정 시점의 부동산 시세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65]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2023년 상반기까지 나타났으나 점차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023년 8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의 전환에도 증가폭은 크지 않아 2023년말까지 부동산 매매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추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분납분을 반영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당해연도 결정세액에 대한 징수액과 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대한 분납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66]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과세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므로[67] 2024년 수납될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분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림 52]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2019.1. ~ 2023.8.



주: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년도는 2021년 6월(2021.6=100)이며, 변동률은 전월대비 변동률을 의미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65) 2023년 10월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66) 당해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다음 연도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67)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0조원으로 공시가격 하락(주택 △15.7%, 토지 △5.7%) 등의 영향으로 전년 전망(6.7조원) 대비 2.7조원(△40.7%) 감소할 전망이다.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국세수입 전망(361.4조원)은 정부의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367.4조원)보다 6.0조원(△1.6%)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2023년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및 2024년 명목GDP 성장률을 각각 2.2%, 4.2%로 전망한 데 반해, 정부는 각각 3.4%, 4.9%로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하였다. 양 기관의 명목GDP 성장률의 전망 차이는 교역조건의 변동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인다.[68]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의 안정세에도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로 2023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내수의 디플레이터 상승률보다 1%p 정도 낮게 전망하였다. 반면, 2024년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세를 반영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내수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률 전망 외에도 대외경제지표 및 고용지표 또한 정부 전망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통관수출 및 통관수입 증가율을 각각 전년대비 7.2%, 5.7%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각각 8.8%, 3.0%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수출 증가율은 높고, 수입 증가율은 낮게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성장률의 회복('23년 2.6% → '24년 2.8%)과 교역량 증가('23년 1.9% → '24년 3.3%)[69]로 대외 경제환경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등 IT품목의 단가 하락세가 완화됨[70]에 따른 상방요인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반도체 수출규제 등 하방요인을 감안하여 통관수출의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또한, 수출의 증가에 따른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통관수입의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통관수출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관수입의 경우 상반기까지의 추이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68)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지출부문)」(2023.10.) 보고서의 p.43~44를 참조하기 바란다.

69)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IMF, OECD, World Bank의 평균값을, 교역량 전망은 IMF와 World Bank의 평균값을 전망의 전제로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70) 반도체 수출단가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3.) △34.3 → ('23.6.) △28.0 → ('23.8.) △21.2

를 바탕으로 원자재 등 수요 확대와 유가 등의 안정적인 흐름을 감안하여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지표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세가 상당부분 돌봄부문 노동수요 증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에서 발생함에 따라 명목임금은 3.0%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등 IT 업황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3.8%)을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도 일부 작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수를 340.3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2023년 9월 재추계한 결과(341.4조원)보다 1.1조원 낮은 수준이다.

[표 33] 2024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정부	NABO	정부	NABO
명목GDP 성장률 (실질성장률)	3.9 (2.6)	3.4 (1.4)	2.2 (1.1)	4.9 (2.4)	4.2 (2.0)
민간소비 증가율	4.1	2.5	2.4	2.2	2.2
설비투자 증가율	△0.9	△1.2	0.6	2.5	4.5
건설투자 증가율	△2.8	0.6	1.0	0.2	0.2
경상수지	298	230	280	450	360
통관수출 증가율	6.1	△6.6	△9.6	8.8	7.2
통관수입 증가율	18.9	△8.6	△10.5	3.0	5.7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3	3.4	2.3	2.4
취업자수 증감	82	32	33	18	24
명목임금 상승률	4.9	2.9	2.9	3.8	3.0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양 기관의 세목별 전망 차이를 살펴보면, 법인세(2.7조원)와 소득세(1.0조원),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등에서 주로 전망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3년 정부 전망 대비 2.0조원(△2.5%) 감소한 77.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전망[71](79.1조원) 대비 4.1조원(△5.2%) 감소한 75.0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대비로는 2.7조원(△3.5%)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2023년 법인영업실적 전망의 차이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상반기의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 세전순이익 감소세(전년동기 대비 △56.5%)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나 상반기 법인영업실적의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2023년 영업이익 증감율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2023.10.12. 기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금년 주요 대기업 실적에 대한 증권사 컨센서스는 △14.8% 수준으로, 업종별로 전기전자(△86.4%[72]), 화학(△17.4%), 철강금속(△8.0%) 등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법인세 신고분이 2023년 전망 대비 5.6조원(△9.4%)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인세 신고분을 2023년 정부 전망 대비 3.0조원(△5.1%)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2023년 정부 전망(114.2조원) 대비 11.6조원(10.2%) 증가한 125.8조원으로 편성하였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전망(114.2조원) 대비 10.7조원(9.3%) 증가한 124.8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을 1.0조원(△0.8%)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주로 양도소득세의 전망 차이(1.3조원)에서 기인한다.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월별 누적 거래량 추이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완화[73]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보다 2024년 소득여건 등 경제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산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회복세도 높게 전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망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

71) 이하 '2023년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의미한다.
72)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은 2.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9% 감소하였다.
73) 누적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3.1.) 주택 △33.9, 토지 △48.8, ('23.8.) 주택 0.9, 토지 △23.2

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차이로 인하여 정부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증권거래세(0.2조원), 종합부동산세(0.1조원) 등 자산관련 세목의 세수를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표 34]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비교 (B-A)	
	2024 예산안 (A)	증감률 (2023 전망[1] 대비)	2024 전망 (B)	증감률 (2023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67.4	7.6	361.4	6.2	△6.0	△1.6
일반회계	356.2	7.6	350.5	6.1	△5.6	△1.6
내국세	321.7	6.1	316.7	4.8	△5.0	△1.5
1. 소득세	125.8	10.2	124.8	9.3	△1.0	△0.8
2. 법인세	77.7	△2.5	75.0	△5.2	△2.7	△3.5
3. 상속세 및 증여세	14.7	6.2	14.0	2.2	△0.6	△4.3
4. 부가가치세	81.4	10.2	81.1	9.1	△0.3	△0.4
5. 개별소비세	10.2	13.7	10.1	12.9	△0.1	△0.9
6. 증권거래세	5.4	△16.7	5.2	△11.7	△0.2	△4.2
7. 인지세	0.9	9.8	0.9	11.8	0.01	0.9
8. 과년도수입	5.7	5.5	5.6	5.3	△0.1	△1.1
교통·에너지· 환경세	15.3	41.4	15.3	38.4	△0.02	△0.2
관세	8.9	22.7	8.7	22.1	△0.2	△2.2
교육세	6.2	17.9	5.8	18.1	△0.4	△5.8
종합부동산세	4.1	△11.9	4.0	△18.4	△0.1	△2.2
특별회계	11.2	8.9	10.8	8.6	△0.3	△3.1
주세	3.6	2.4	3.5	2.6	△0.1	△1.9
농어촌특별세	7.6	12.2	7.3	11.7	△0.3	△3.7

주: 1) 2023년 9월 정부가 재추계한 전망치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Ⅲ.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1.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74)]

2023~2027년간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2023~2024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및 미-중 갈등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성장세가 제약되겠으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잠재 GDP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GDP 기준으로는 2018~2022년 연평균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3~'27	'18~'22
실질GDP 성장률	1.1	2.0	3.0	2.6	2.3	2.5	2.1
명목GDP 성장률	2.2	4.2	5.1	4.8	4.4	4.6	3.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1	2.2	2.0	2.2	2.1	2.1	1.2
통관수출 증가율	△9.6	7.2	7.1	7.1	7.1	7.1	3.1
통관수입 증가율	△10.5	5.7	6.4	6.5	6.6	6.3	8.1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2.4	2.2	2.2	2.1	2.2	2.1
취업자수 증감(만명)	32.9	23.7	21.5	15.1	10.1	20.7	27.3
명목임금 상승률	2.9	3.0	3.4	3.2	3.2	3.2	3.5
국고채금리(3년)	3.5	3.0	2.8	2.6	2.5	2.9	1.8
회사채금리(3년, AA-)	4.3	3.6	3.3	3.2	3.1	3.5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실질GDP 성장률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동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 경로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 부진, 대내외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되어 1.1%의

74)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3.10.)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며 우리 경제의 잠재GDP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 이후 다시 균형성장경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합산하여 전망하였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4.6%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3년 명목GDP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으로 GDP디플레이터의 상승률(1.1%)이 낮게 나타나면서 2.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국제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2%)이 높아지면서 명목GDP 성장률 또한 전년 대비 4.2%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GDP 성장률이 2025~2026년 일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5.1%, 2026년 4.8%를 기록하다가 2027년에는 4.4%로 이전 성장률 대비 낮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2027년 기간 중 평균 2.2%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수입물가 하락 및 공공요금 인상 지연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축소의 영향으로 이전 대비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3.4%의 상승률을 나타낸 후 2024년에는 민간소비 상승세 둔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2.4%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주요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2027년 2.1%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2022~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시장 활성화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 향후 증가세가 10~20만명 전후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전 5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는 2022년의 일시적인 높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이전 5년보다 오히려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국고채금리(3년)는 우리나라와 대외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여 3.5%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축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하락한 3.0%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2023~2027년간에도 연평균 2.9%로 이전 5년의 연평균 수준(1.8%)과 비교하여

1.1%p 높게 전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등에 주로 기인한다. 회사채금리(3년, AA-)의 경우 국고채금리(3년)와 같이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축소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금리(3년)와의 차이가 2023년 0.8%p에서 2027년 0.6%p로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경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 정도와 통화 긴축정책의 종료 여부, 미·중 갈등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전망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가. 세목별 전망 방법

주요 세목별로 2023~2027년간 중기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 세목별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세부 세목별로 전망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명목GDP와 그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비임금근로자수와 사업소득 신고율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세도 임금근로자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과 같은 고용관련 변수를,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신고분 법인세는 명목GDP 성장률,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설비투자, 교역조건[75]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천분 법인세는 기업의 금융자산, 회사채금리, 명목GDP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도별 법인세 전망치는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 추정치를 합산한 후,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수입배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75) 교역조건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27년간 총수출 및 총수입의 GDP디플레이터 전망치 변동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명목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였다.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목별 전망모형을, 과년도수입은 명목GDP 성장률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다른 세목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표 36]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 종합소득세: 민간소비, 비임금근로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 금리, 명목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근로소득세: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이자·배당소득세: 금리, 명목GDP, 민간소비, 환율, 개인 채권 잔액, 개인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법인세	○ 신고분: 명목GDP, 원/달러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설비투자, 교역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원천분: 명목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부가가치세	○ 명목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기타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증여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 —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 개별소비세: 품목별로 명목GDP, 민간소비와 신차판매량, 담배출고량, 유류소비량의 최근 추이 및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 ○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거래대금을 명목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 ○ 인지세: 명목GDP 성장률 및 세수탄력성 등을 이용하여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휘발유 및 경유 수요전망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 관세: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과세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표 37]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누 적 법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합계	△10,344	△8,419	△7,907	△7,771	△7,735	△42,176
소득세	△8,829	△6,655	△5,607	△4,999	△4,469	△30,559
법인세	△503	△9	△79	△162	△254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6,102
기타	△355	△658	△896	△1,165	△1,434	△4,507
순 액 법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합계	△10,344	1,925	511	137	1,382[1)]	△6,389[1)]
소득세	△8,829	2,173	1,048	608	530	△4,469
법인세	△503	494	△70	△83	△92	△254
부가가치세	△656	△440	△229	△119	△133	△1,578
기타	△355	△302	△238	△269	1,077[1)]	△88[1)]

주: 1. 누적법은 2023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효과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이며,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안(5년 → 20년)'은 2028~2044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분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2023~2027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 5년(2018~2022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연평균 7.8%)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23~2027년간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4.6%로 전망되어, 이전 5년(3.3%)에 비해 높았으나, 국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탄성치가 2018~2022년에 비해 낮을 것[76)]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향후 5년의 국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탄성치와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5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하여 자산시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2023~2027년간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전 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76) 국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평균 탄성치(절댓값 기준): ('18~'22년) 2.6 → ('23~'27년 전망) 2.4

데 높은 금리 수준은 부동산 등 자산수요를 억제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의 보유나 거래와 관련한 세수의 증가세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3년 114.2조원에서 2027년 159.3조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11.1%)과 비교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의 세입여건을 구성하는 임금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 등 고용시장 지표가 이전 5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고, 양도소득세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한 자산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이전 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023년 79.1조원에서 2027년 96.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9.9%)과 비교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성장둔화로 인한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2023년 및 2024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쳐 이후 세수전망의 베이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세수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도 법인세수 증가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2023년 74.4조원에서 2027년 96.5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3.9%)과 비교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77]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로 2023년 35.5조원에서 2027년 49.1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자산세수는 이전 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기 부진 등 시장요인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전 5년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14.2%)과 달리 연평균 0.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77) 민간소비 증가율(연평균, %): ('18~'22년) 3.6 → ('23~'27년) 4.6

[표 38] 2023~202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3~’27	’18~’22
총국세	340.3	361.4	390.4	416.6	438.8	6.6	7.8
소득세	114.2	124.8	137.6	149.1	159.3	8.7	11.1
법인세	79.1	75.0	82.8	89.7	96.4	5.1	9.9
부가가치세	74.4	81.1	86.9	92.0	96.5	6.7	3.9
기타[1]	72.6	80.5	83.1	85.9	86.5	4.5	4.7
- 기타 소비세수	35.5	43.4	46.5	47.9	49.1	8.5	△2.3
- 기타 자산세수	37.2	37.0	36.6	38.0	37.4	0.2	14.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의 세목을 포함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 ·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3~2027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세수입은 2023년 341.4조원에서 2027년 444.9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을 매년 1.1~10.9조원 하회하며, 2023~2027년간 합계는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표 39]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40.3 (△14.1)	361.4 (6.2)	390.4 (8.0)	416.6 (6.7)	438.8 (5.3)	(6.6)
	명목GDP 성장률	2.2	4.2	5.1	4.8	4.4	(4.6)
정부	국세수입	341.4 (△13.8)	367.4 (7.6)	401.3 (9.2)	423.2 (5.5)	444.9 (5.1)	(6.8)
	명목GDP 성장률	3.4	4.9	4.6	4.4	4.2	(4.6)
NABO – 정부		△1.1	△6.0	△10.9	△6.6	△6.1	[△30.7]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3~2027년간 세수전망의 차이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간중 경제지표의 전망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2.2%, 2024년 4.2%로 정부보다 각각 1.2%p, 0.7%p 낮게 전망하였다. 2025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를 상회하지만, 2023~2024년의 차이로 인하여 2023~2027년간 명목GDP 규모는 정부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속적으로 낮게 전망[78]하고 있다.

또한, 중기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의 국세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1.1조원 낮게 전망한 점과 세수부양성(명목GDP 성장률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탄력성)의 차이 또한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감소하는 2023년을 제외하고 2024~2027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연평균 세수부양성은 정부 1.49, 국회예산정책처 1.41 수준이다.

78) 명목GDP 전망치 규모: (NABO) ’25년 2,421조원, ’26년 2,538조원, ’27년 2,651조원
(정부) ’25년 2,454조원, ’26년 2,564조원, ’27년 2,672조원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 · 2672 · 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SN 3022-1242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2-001981-14
ISSN	3022-124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